
정책참고자료

2016-12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국민안전처		
	지자체와 함께하는 현장점검	_____	4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시연회 및 정책간담회 실시		
2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강원 고성군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 중재	_____	14
3	기획재정부		
	5.31. 현재, 114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_____	16
4	교육부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효율화 추진계획 발표	_____	18
5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 농·어민 대상 무료 정보화교육 본격 추진	_____	34
	국립과천과학관 식용곤충 특별기획전	_____	36
	-미래 식량자원으로의 곤충이해 및 곤충산업소개-		
6	문화체육관광부		
	유해한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 전면 교체한다	_____	39
	문체부, 관광통역안내 서비스 질 제고 추진	_____	41
7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산업 유망 일자리 한 자리에 모인다	_____	43
	- '16귀농귀촌 일자리 및 창업 박람회 -		

	읍면동 단위 지역 농업정보를 한 눈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개시-	52
8	환경부	
	평창동계올림픽 탄소상쇄로 지구온도 내린다.	56
9	고용노동부	
	자치단체의 일자리 추진 정책과 성과를 「지역일자리 한마당」에서 확인하세요	65
10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율 30.1%	69
11	국토교통부	
	‘강릉 신한옥 시범마을’ 2일 상량식	79
12	해양수산부	
	해수부-강원도, “해양심층수” 개발 위해 손잡는다.	83

“지자체와 함께하는 현장점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시연회 및 정책 간담회 실시
 - 소방, 경찰 등 8대 기관, 재난안전통신망의 현장업무 적용 시험 -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자체와 함께하는 현장점검 계획의 일환으로 6.3.(금) 10:30 평창 알펜시아스타디움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 검증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시연회」와 「정책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시범사업('15. 11. 19 ~ '16. 6. 16)은 평창 동계올림픽지역(강원 평창, 강릉, 정선)을 대상으로 기지국을 설치하고 단말기를 보급하여 시범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전국에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본격화하는 본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시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방, 경찰 등 주요 필수 이용기관이 참여하여 실제 재난상황 시나리오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성능 및 기능을 시험하고, 정책간담회를 통해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 시연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올림픽 경기장에서 원인미상 폭발·화재 발생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재난대응에 음성, 문자,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서비스가 가능한 재난안전통신망을 적용하여 영상그룹통화 등 재난안전통신망 특화기능을 선보였다.
 - 먼저, 올림픽 자원봉사자의 신고로 사건을 접수하고, 다수의 재난대응기관에 동시에 상황을 전파하여 짧은 시간 안에 재난대응체계로 전환하는 기능을 시연하였다.
 - 이어서, 대형화재로의 상황변화에 대해 재난안전통신망의 영상그룹통

화 및 회의 통화기능으로 멀티미디어 현장정보 공유 및 유관기관 통합 상황 작전회의를 실시하였다.

- 재난이 확대되고 경기장 구조물 붕괴 상황에서 지역선택 호출 기능과 단말기위치확인, 비상통화기능을 활용한 유관기관 합동 수색작전과 부상자 위치확인 및 구조요청을 시연하였다.
 - * 지역선택 호출 : 임의 지역에 있는 모든 단말기를 선택하여 호출
 - * 비상통화 : 단말기의 비상버튼을 누를 경우, 동일그룹에서 최우선으로 통화할 수 있는 기능
- 마지막으로 재난상황에서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해 이동중계차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와 협력하여 통신 장애 복구를 시연하였다.
- 특히, 이번 시연은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 지역의 주요 재난대응 기관에서 직접 참여하여 운영 전 시험을 통해 향후 시행착오를 줄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시연회 실시 후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의 활용성 극대화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간담회에는 강원도, 미래부·국방부, 군·경·소방 등 재난안전통신망 이용기관, 사업자, 기술위원회 및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 간담회에서 재난대응기관들은 일원화된 재난망 사용이 재난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본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하였다.
 - 한편,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 장비에 대한

지속적이고 확실한 투자와 특히,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이동기지역 추가, 이용기관 간의 끊임없는 훈련과 협업 등이 논의되었다.

-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종합시연 결과를 반영하여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참고 1

지자체와 함께하는 현장점검 계획

□ 점검 개요

○ 일시 및 장소 : '16. 6. 3.(금), 10:30,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일원

○ 주요활동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시연
 - * 통신SOP 기반 기관별 종합시험 훈련 및 강평
-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
 - * 재난안전통신망 이용자, 사업자 및 관계 전문가 등 참석

○ 참여자

- (국민안전처) 장관, 재난관리실장, 재난예방정책관, 대변인,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재난안전통신망구축기획단장 등
- (강원도) 도지사, 평창군수, 재난안전실장, 동계올림픽본부장, 강원소방본부장, 36사단장, 강원지방경찰청장 등
- (기타) 올림픽조직위 기획사무차장, 사업자(KT, SKT), 기술위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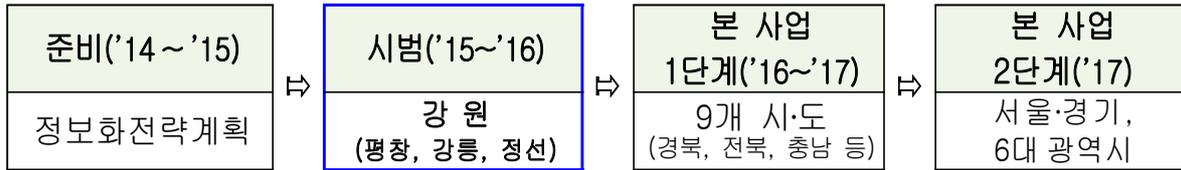
□ 세부 일정

구분			주요내용	비고
시연회	10:30 ~ 11:10	40'	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시연 ▶ 평창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 1층 - 사업설명 및 오프닝 동영상(10') - 종합시험 및 시연(20') - 장관/강원도지사 훈련강평(10')	* 사회 : 통신망 구축기획단장
이동	11:10 ~ 11:20	10'	▶ 시연장 → 간담회장	
간담회	11:20 ~ 12:20	60'	② 간담회 ▶ 평창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 2층 - 장관/강원도지사 인사말씀(5') - 토론 발제(10') ① 통신망 구축기획단 5' ② 동계올림픽본부 5' - 통신망 활용·발전 관련 토론(40') - 장관/강원도지사 마무리 말씀(5')	* 사회 : 도 안전총괄과장 * 참석 20여명 - 강원도지사, 평창군수 등 - 통신망 이용자(8기관), 사업자 및 기술위원 * 발제 - 통신망 구축기획단장 - 동계올림픽본부장

참고 2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추진계획

< 전체 사업일정 >



1 추진배경

- 세월호 사고('14.4월)에 따라 국가전체 초기 재난대응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핵심기반 인프라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필요성 제기

< 대통령 대국민 담화말씀('14.5.19.) >

- ▶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이에 따라, 재난관련기관이 재난현장에서 일원화된 지휘·명령 및 통합대응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최첨단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추진
 - * (재난안전통신망 정의) 재난구조(Disaster Relief)+공공안전(Public Protection) 통신망을 통합한 최첨단 무선통신망

2 추진경과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방향 확정('14.5.27, 국무회의)
 - * 주요내용 : '15~'17년까지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 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을 PS-LTE*로 선정('14.7.31, 국가정책조정회의)
 - * PS-LTE(Public Safety-Long Term Evolution) : 음성, 문자,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 지정('14.9.17) 및 700MHz 주파수 확정('14.12.10)
- 정보화전략계획 추진('14.10~'15.3) 및 세부 추진계획 확정('15.3.31, 국무회의)
- 시범사업 추진 중('15.11.19~'16.6.16, 강원도 평창·강릉·정선 지역)

3 전체 사업 계획

○ (사업 기간) 2015 ~ 2017년(3년) / 구축비 10,408억원(ISP기준)

시 범('15~'16)	본사업 1단계('16~'17)	본사업 2단계('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평창동계올림픽 지역 • 예산액 : 436억원 • 기간 : '15.11.19~'16.6.16(7개월) • 구축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운영센터 구축 - 기지국 206개소 - 단말기 2,496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 세종, 강원, 충북·남, 전북·남, 경북·남, 제주(9개) • 예산액 : 3,000억원(목적예비비) • 기간 : '16.10~'17.7(9개월) • 구축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운영센터 장비 추가 증설 - 기지국 7,272개소 - 단말기 101,197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 서울·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8개) • 예산액 : 4,967억원(중기재정 기준) • 기간 : '17.3~'17.12(9개월) • 구축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운영센터 구축 - 기지국 4,319개소 - 단말기 109,745대

* 10년간 운영비('15~'24년) 8,470억원을 포함할 경우 전체 사업비는 18,878억원

○ (구축 방식) PS-LTE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망 구축

○ (주파수) 700MHz 대역 20MHz 폭(상향 : 718~728MHz, 하향 : 773~783MHz)

○ (이용기관) 8대 분야* 333개 필수기관

* 경찰(18), 소방(20), 해경(6), 군(25), 지자체(243), 의료(17), 전기(2), 가스(2)

4 시범사업 추진 현황

○ (사업기간) '15.11.19.~'16.6.16.(7개월간)

○ (사업지역) 평창 동계올림픽 지역(평창, 강릉, 정선)

* 제1사업자(KT) : 평창, 제2사업자(SKT) : 강릉, 정선

○ (총사업비) 343억원(구축사업비 : 339억원, 운영비 : 4억원)

* 운영센터 주제어시스템(1식), 기지국(205개소), 이동기지국(1식), 단말기(2,496대)

○ (사업내용) 강원도 3개 지역에 시범망을 구축하고, 종합테스트를 통해 그룹통화, 보안성 등 37개 요구기능을 구현

- PS-LTE 기술방식, 상호운용성, 보안성, 타 통신망과의 연동방안 등을 검증하여 사업계획 보완, 확산·완료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반 확보

○ (추진현황)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 계약체결* 및 착수('15.11.19), 시범사업 설계, 운영센터 기반시설 구축 등 시범사업 마무리 단계

참고 3

쉽게 알아보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

재난안전통신망의 필요성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방법

재난안전통신망의 산업·경제 효과

01 재난안전통신망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재난안전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전국 단일 무선통신 기반 8대 분야 333개 재난관련기관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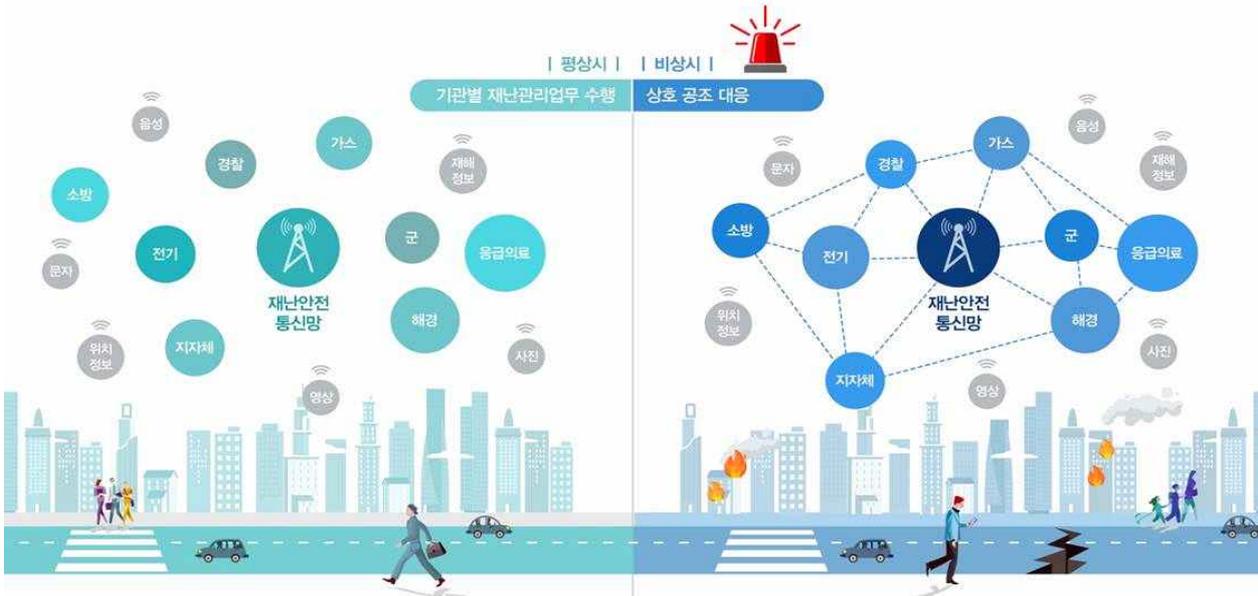
재난안전통신망의 필요성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방법

재난안전통신망의 산업·경제 효과

02 재난안전통신망은 왜 필요한가요?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안전사고 피해 경감
- 일원화된 지휘·명령 및 상호공조 체계
- 음성·영상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03 상업용 이동통신을 활용할 수는 없나요? ..

공익적 목적으로 인해 보안성이 중요하며 통화량 폭주에도 통신유지가 필요
다만, 필요시 보완적으로 상용망 이용

상업용 이동통신 [일반국민 사용]		재난안전통신망 [공익적 목적]	
상대적으로 보안 취약	재난 발생시 안정적 통신 어려움	보안 중요	재난 발생시 통신 유지

- 직접 통화**
기지국 파괴 시에도 근거리에서 단말기간 직접 통화 가능
- 단독 기지국**
기지국 단독으로 커버리지 범위 내에서 통신 유지 가능
- 그룹 통화**
임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여러 명이 동시에 통화 가능
- 응답속도 0.3초, 양질의 통화품질, 외장 단축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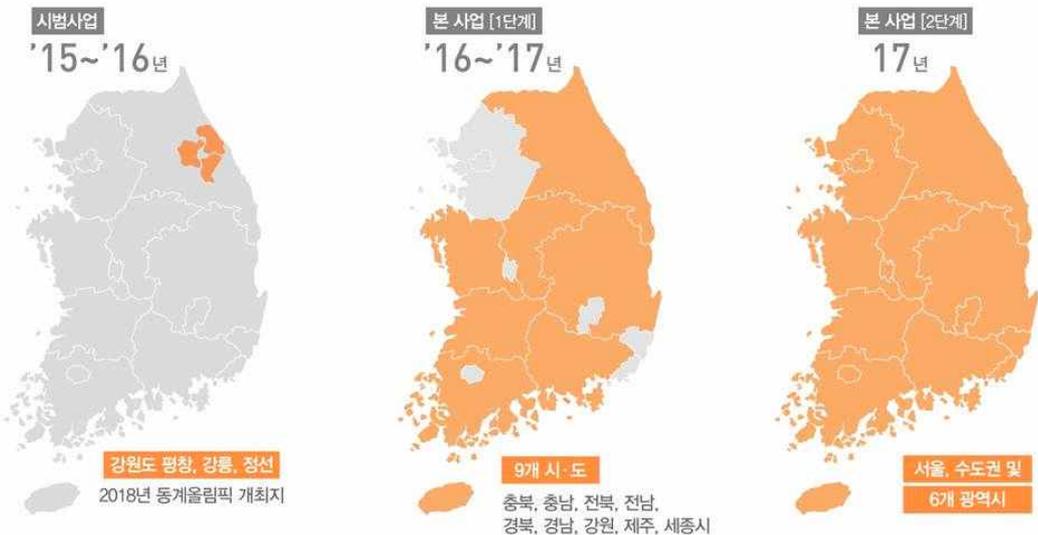
상업용 이동통신 시설 활용

- 자원의 낭비 예방
- 통화 어려운 지역 보완적 이용

04 새로운 재난안전통신망은 언제, 어떻게 구축되나요?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이후, 안정화 기간(1년 이상)을 거쳐 기존 통신망 교체

- 운영센터 (2개소)
- 기지국 전국 설치
- 단말기 보급



05 외국의 재난안전통신망은 어떻게 구축하고 있나요? ..

해외 주요국들도 이미 음성 위주의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통신기술의 진화에 따라 PS-LTE 재난안전통신망 도입 검토 및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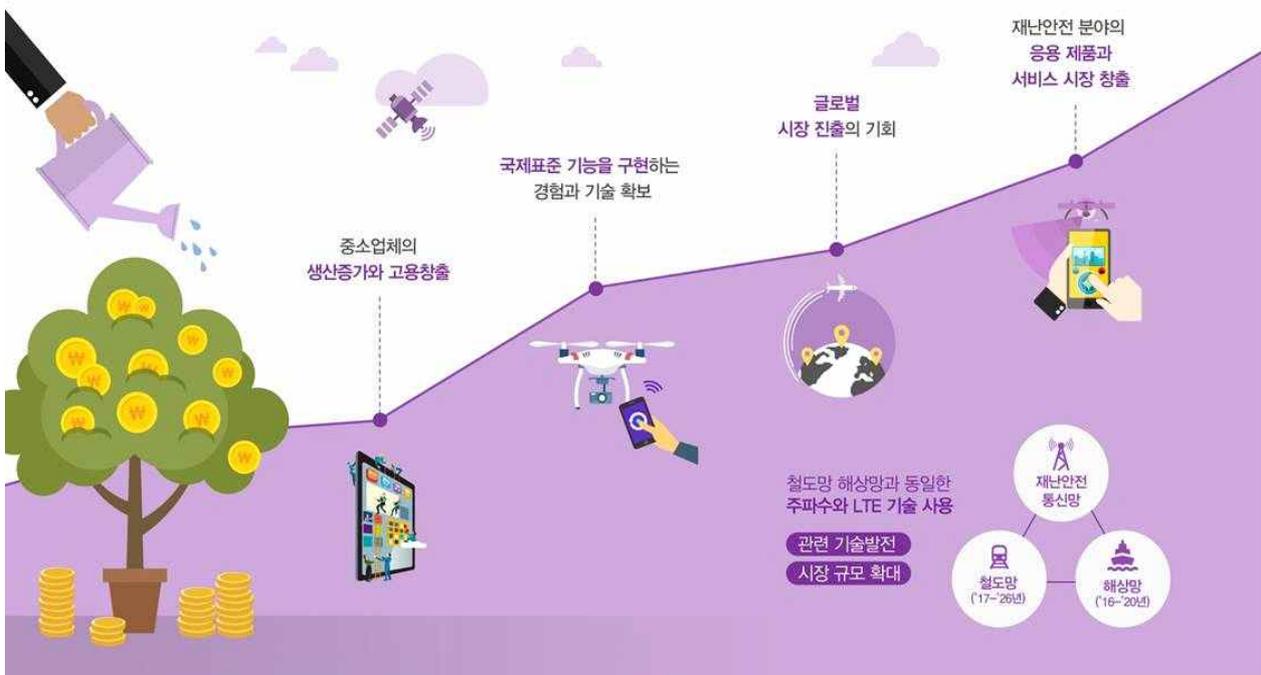


전세계적으로 도입 확산
2018년 3월 PS-LTE 관련 국제표준 마무리

PS-LTE 기술 확산으로
구축·운영 비용 절감

국가간 연동으로 글로벌 차원의
통합적 재난예방 및 대응 가능

06 국내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



07 향후 재난안전통신망은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요? ..

앞으로 10년간 우수한 기능을 추가하여 4세대 통신망 사용 ▶ 2020년대 말까지 5세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 이동통신 기술의 진화 |



권익위, 강원 고성군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 중재 軍·고성군청 간 합의 이끌어내...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고성군 아야진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변경되고 소초*가 이전되어 인근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을 경계하는 소규모 부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9일 강원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과 소초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인근 주민들은 2007년도에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마을 가운데 건립된 소초로 인해 관광객 유치에 지장이 있고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변경과 소초이전을 요구해 왔다.

군(軍)은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아야진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필요하고 소초이전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고성군 측이 국방예산으로 소요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맞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아야진리 주민 697명은 작년 4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 권익위는 수차례 실무협의를 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19일 지역주민들과 육군 제22사단 등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영훈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

조정안에 따르면 군(軍)은 ▲ 아야진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하여 조치하고 ▲ 소초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며, ▲고성군은 민간투자사업 방식 등을 검토하여 소초 이전비용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군(軍)과 고성군이 지역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성사되어 700세대 1,400여명의 생활 터전인 아야진 일대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권익위는 기관 간 협업·소통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앞으로 현장중심의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5.31일 현재, 114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 5.31일(화) 현재 120개 공공기관 중 114개 기관(95.0%)이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 완료
 - 공기업(30개)은 30개 기관 모두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 완료
 - 준정부기관(90개)은 84개 기관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 완료하였음

붙임 :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추진 현황

붙임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추진 현황 (5.31 기준)

주무부처 [완료/대상]	공기업(30개)	준정부기관(84개)
기재부(1/1) 교육부(3/3)	한국조폐공사	한국장학재단, 사학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미래부(9/9)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외교부(1/1)		한국국제협력단
문체부(5/8)	한국관광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농식품부(6/6)	한국마사회	농림수산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산업부(27/27)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광해 관리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복지부(7/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경부(4/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 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고용부(6/6)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승강기 안전기술원, 근로복지공단
여가부(2/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14/14)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해수부(9/9)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방통위(2/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금융위(5/5)		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안전처(2/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인사처(1/1)		공무원연금공단
보훈처(2/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식약처(1/1)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산림청(1/1)		한국임업진흥원
경찰청(1/1)		도로교통공단
농진청(1/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기청(2/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허청(1/1)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상청(1/1)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 발표

- 인구·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적정규모의 교육지원청 운영 필요 -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시·도교육청의 지역단위 교육행정 기관인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이번 추진계획은 최근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관할 학생수가 3천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 행·재정적 비효율이 초래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자율 통·폐합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지방교육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 * '16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및 교육통계: '00년 학생수(7,952천명) → '15년 학생수(6,089천명) → '22년 학생수(5,274천명)
 - ** 학생수 3천명 미만 교육지원청 갯수: '00년, 1곳(울릉) → '16년, 25곳 → '22년, 33곳
 - ※ [학생수 '3천명 미만' 설정 사유](#): [참고4] 추진계획 주요내용 중 '소규모 교육지원청 범위설정' 참조
- 그간 적정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조직 축소를 우려하는 교육청의 거부감 및 지역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으로 지방교육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이에, 교육부는 적정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유도를 위한 법령 정비와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 추진하여 교육청이 자발적으로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기존에는 인구수 10만명 또는 학생수 1만명 미만을 관할하는 교육지

원청에 2과 1센터를 설치하도록 대통령령(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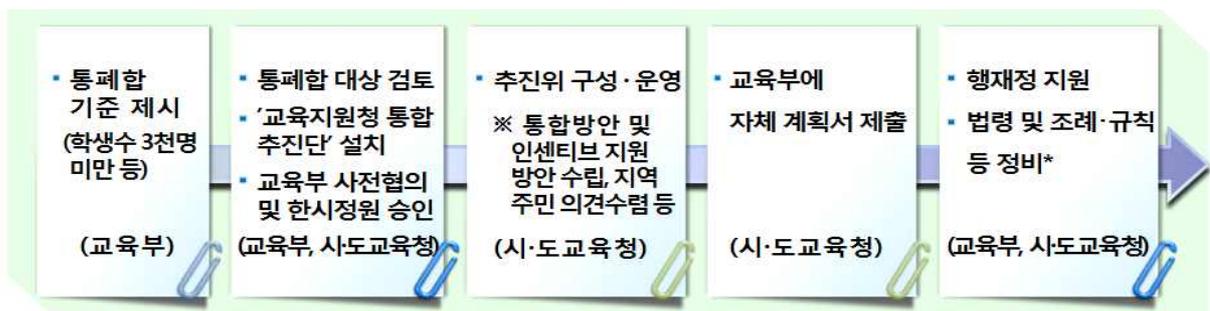
- 인구수·학생수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3년 연속, 인구수 3만 명 학생 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보조기관(과)이 없는 단일조직 수준으로 규모를 의무 축소하도록 법령을 일부 개정(교육지원청 기구설치 하한선 마련)한다.

② 시·도교육청의 자발적 통폐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재정적 지원) 통합지역 교육사업 및 여건 개선 등을 위해 4년간 특별교부금 및 총액인건비 지원
- (행정적 지원) 통·폐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시기구 설치 및 폐지되는 교육지원청 지역에 '교육지원센터' 설치 허용

※ (교육지원센터) 유휴 청사 및 지원 예산이 지역주민 학습관 등 주민을 위한 교육사업 및 여건 개선 등에 직접 사용되도록 하여, 해당 지역에 보다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추진

< 교육지원청 자율 통·폐합 추진 절차(안) >



* (교육부) 교육자치법시행령 (교육청) 정원조례·규칙, 행정기구조례·규칙 등

③ 통·폐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우수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적정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올해 9월부터 1년 동안 2~3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중간보고회 및 환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보완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추진 절차 및 일정(안) >

시범사업 대상 선정	시범사업 안내 (‘16. 5월)	희망교육지원청 신청 (‘16. 5월 ~ 7월)	지역별, 규모별 현황 등 검토 후 대상 선정 (‘16. 8월)	
시범사업 심사	시범사업 실시 (특별교부금 지원, ‘16. 9월)	중간보고회 (‘17. 2월)	개선방안 등 도출·환류 (‘17. 3월)	시범사업 종료 (‘17. 8월)
타 시·도 확산	통·폐합 우수모델 제시 (‘17. 9월)		타 시·도 확산 (‘17. 9월~)	

- 교육부는 올해 9월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6월중 입법예고)을 완료하고, 시범 교육지원청 선정 등 소규모 교육지원청 자율 통·폐합 추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 교육부 승응배 지방교육국장은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이 시행되면, 학생 수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규모가 적정화되어 재정 효율도 및 지역단위 교육행정 서비스의 품질 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참 고】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2. 인구수 3만명/학생수 3천명 이하 소규모 교육지원청 현황
3. 2개 행정구역 관할 교육지원청 사례 및 통·폐합 추진 유형 예시
4.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 <신설>	제11조의2(교육지원청 효율화) ①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p>[별표 3] 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제11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국</th> <th>과·담당관·센터</th> </tr> </thead> <tbody> <tr> <td>인구 50만명 이상</td> <td>학생 5만명 이상</td> <td>2국</td> <td></td> </tr> <tr> <td>인구 50만명 미만 30만명 이상</td> <td>학생 5만명 미만 3만명 이상</td> <td></td> <td>4과(담당관) 2센터</td> </tr> <tr> <td>인구 30만명 미만 15만명 이상</td> <td>학생 3만명 미만 1.5만명 이상</td> <td></td> <td>3과(담당관) 2센터</td> </tr> <tr> <td>인구 15만명 미만 10만명 이상</td> <td>학생 1.5만명 미만 1만명 이상</td> <td></td> <td>2과(담당관) 2센터</td> </tr> <tr> <td>인구 10만명 미만</td> <td>학생 1만명 미만</td> <td></td> <td>2과(담당관) 1센터</td> </tr> </tbody> </table> <p>비고 1.~2. (생략)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사무 일부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교육지원청은 2과(담당관) 이내의 기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신설></p>	구분		국	과·담당관·센터	인구 50만명 이상	학생 5만명 이상	2국		인구 50만명 미만 30만명 이상	학생 5만명 미만 3만명 이상		4과(담당관) 2센터	인구 30만명 미만 15만명 이상	학생 3만명 미만 1.5만명 이상		3과(담당관) 2센터	인구 15만명 미만 10만명 이상	학생 1.5만명 미만 1만명 이상		2과(담당관) 2센터	인구 10만명 미만	학생 1만명 미만		2과(담당관) 1센터	<p>[별표 3] 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제11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국</th> <th>과·담당관</th> </tr> </thead> <tbody> <tr> <td>인구 50만명 이상</td> <td>6만명 이상</td> <td>2국이내</td> <td></td> </tr> <tr> <td>인구 50만명 미만 30만명 이상</td> <td>학생 6만명 미만 4만명 이상</td> <td></td> <td>5과(담당관)이내</td> </tr> <tr> <td>인구 30만명 미만 15만명 이상</td> <td>학생 4만명 미만 2만명 이상</td> <td></td> <td>4과(담당관)이내</td> </tr> <tr> <td>인구 15만명 미만 10만명 이상</td> <td>학생 2만명 미만 1만명 이상</td> <td></td> <td>3과(담당관)이내</td> </tr> <tr> <td>인구 10만명 미만</td> <td>학생 1만명 미만</td> <td></td> <td>2과(담당관)이내</td> </tr> </tbody> </table> <p>비고 1.~2. (현행과 같음) 3. 위 표의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이후 3년 연속하여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학생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다. 4.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른 관할구역의 교육지원청을 통합하는 경우 다른 관할구역 지원을 위한 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p>	구분		국	과·담당관	인구 50만명 이상	6만명 이상	2국이내		인구 50만명 미만 30만명 이상	학생 6만명 미만 4만명 이상		5과(담당관)이내	인구 30만명 미만 15만명 이상	학생 4만명 미만 2만명 이상		4과(담당관)이내	인구 15만명 미만 10만명 이상	학생 2만명 미만 1만명 이상		3과(담당관)이내	인구 10만명 미만	학생 1만명 미만		2과(담당관)이내
구분		국	과·담당관·센터																																														
인구 50만명 이상	학생 5만명 이상	2국																																															
인구 50만명 미만 30만명 이상	학생 5만명 미만 3만명 이상		4과(담당관) 2센터																																														
인구 30만명 미만 15만명 이상	학생 3만명 미만 1.5만명 이상		3과(담당관) 2센터																																														
인구 15만명 미만 10만명 이상	학생 1.5만명 미만 1만명 이상		2과(담당관) 2센터																																														
인구 10만명 미만	학생 1만명 미만		2과(담당관) 1센터																																														
구분		국	과·담당관																																														
인구 50만명 이상	6만명 이상	2국이내																																															
인구 50만명 미만 30만명 이상	학생 6만명 미만 4만명 이상		5과(담당관)이내																																														
인구 30만명 미만 15만명 이상	학생 4만명 미만 2만명 이상		4과(담당관)이내																																														
인구 15만명 미만 10만명 이상	학생 2만명 미만 1만명 이상		3과(담당관)이내																																														
인구 10만명 미만	학생 1만명 미만		2과(담당관)이내																																														

참고2

인구수 3만명/학생수 3천명 이하 소규모 교육지원청 현황

◇ '인구수 3만 또는 학생수 3천' 미만(연속 3년) : 총 25개

○ 강원 3, 경남 2, 경북 8, 전남 4, 전북 5, 충남 1, 충북 2

시도	연번	교육지원청명	관할 지자체	인구수 ('16.3.31 기준)	학생수 ('16.3.31 인구통계)	교원수 ('15.4.1)	지방공무원 정원 ('15.12.31)			지방공무원 1인당	
							소계	일반직	교육 전문직	학생수	교원수
강원 (3)	1	양구교육지원청	양구군	24,035	2,898	351	33	25	8	87.8	10.6
	2	화천교육지원청	화천군	26,696	2,558	361	38	30	8	67.3	9.5
	3	고성교육지원청	고성군	29,279	2,394	352	36	28	8	66.5	9.8
경남 (2)	4	산청교육지원청	산청군	35,953	2,707	437	35	27	8	77.3	12.5
	5	의령교육지원청	의령군	28,312	2,101	363	35	27	8	60.0	10.4
경북 (8)	6	청도교육지원청	청도군	43,586	2,954	421	34	27	7	86.9	12.4
	7	고령교육지원청	고령군	34,481	2,907	318	33	26	7	88.1	9.6
	8	영덕교육지원청	영덕군	39,162	2,902	344	33	26	7	87.9	10.4
	9	봉화교육지원청	봉화군	33,692	2,507	369	33	26	7	76.0	11.2
	10	청송교육지원청	청송군	26,375	1,711	287	33	26	7	51.8	8.7
	11	영양교육지원청	영양군	17,793	1,317	205	30	24	6	43.9	6.8
	12	군위교육지원청	군위군	24,113	1,303	198	31	24	7	42.0	6.4
전남 (4)	13	울릉교육지원청	울릉군	10,065	694	114	8	4	4	86.8	14.3
	14	함평교육지원청	함평군	34,679	2,849	434	35	27	8	81.4	12.4
	15	신안교육지원청	신안군	43,214	2,772	493	43	35	8	64.5	11.5
	16	곡성교육지원청	곡성군	30,637	2,574	316	35	27	8	73.5	9.0
	17	구례교육지원청	구례군	27,276	2,563	302	34	26	8	75.4	8.9
전북 (5)	18	순창교육지원청	순창군	29,445	2,793	407	37	29	8	75.5	11.0
	19	임실교육지원청	임실군	29,495	2,354	381	37	29	8	63.6	10.3
	20	무주교육지원청	무주군	25,110	2,309	334	35	27	8	66.0	9.5
	21	진안교육지원청	진안군	26,137	2,197	382	36	28	8	61.0	10.6
	22	장수교육지원청	장수군	23,254	2,130	334	34	26	8	62.6	9.8
충남 (1)	23	청양교육지원청	청양군	32,227	2,658	355	34	26	8	78.2	10.4
충북 (2)	24	보은교육지원청	보은군	34,232	2,909	418	39	31	8	74.6	10.7
	25	단양교육지원청	단양군	30,651	2,722	359	38	30	8	71.6	9.4
평균				29,596	2,391	345	34	26	8	70.8	10.2

□ 2개 행정구역 관할 교육지원청 운영 우수 사례 (道 지역)

2개 행정구역 관할 교육지원청 운영 사례 : 속초양양교육지원청(강원) <15.3.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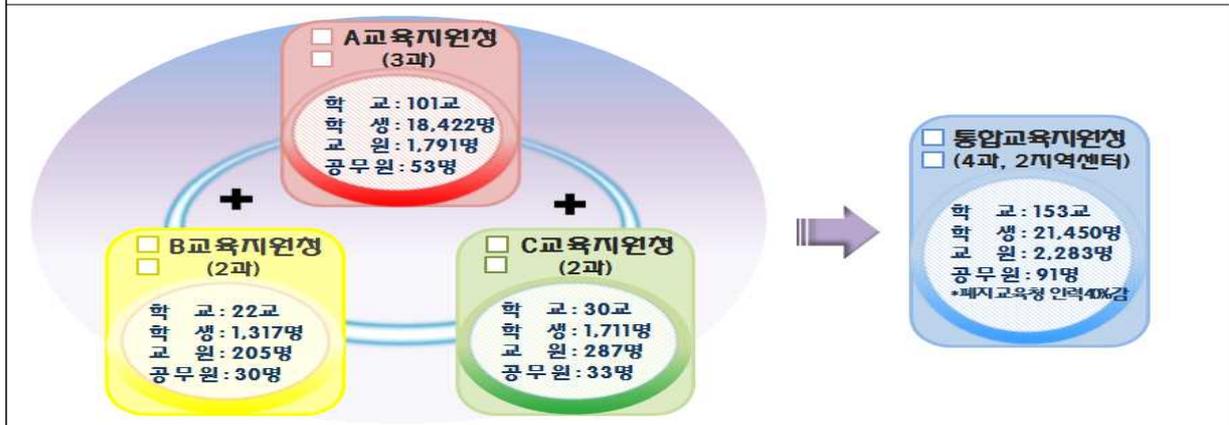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구역 : 속초시, 양양군 ○ 인구수 : 109,402명(속초 : 82,083명, 양양 : 27,319명) ○ 학생수 : 12,397명(속초 : 9,944명, 양양 : 2,453명) ○ 학교수 : 65개교, 교원수 : 1,131명 ○ 교육지원청 공무원수 : 5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1인당 학생수 243명, 교원수 22명 <p>※ 양양교육지원센터를 설치('15.3.1)하여 양양지역 교육복지, 영재교육, 학부모지원, 학습종합클리닉, Wee센터 운영 등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구 : 2과 1센터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div>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width: 33%;">교육과</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width: 33%;">행정과</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width: 33%;">양양교육지원센터</td> </tr> </table>	교육과	행정과	양양교육지원센터
교육과	행정과	양양교육지원센터		

□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 유형(예시)

1+1 통합 :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인근 교육지원청에 통합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input type="checkbox"/> A교육지원청 (4과2센터) </div> <table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d>학 교: 117교</td></tr> <tr><td>학 생: 33,743명</td></tr> <tr><td>교 원: 2,670명</td></tr> <tr><td>공무원: 55명</td></tr> </table>	학 교: 117교	학 생: 33,743명	교 원: 2,670명	공무원: 55명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input type="checkbox"/> B교육지원청 (2과) </div> <table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d>학 교: 60교</td></tr> <tr><td>학 생: 2,772명</td></tr> <tr><td>교 원: 493명</td></tr> <tr><td>공무원: 43명</td></tr> </table>	학 교: 60교	학 생: 2,772명	교 원: 493명	공무원: 43명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input type="checkbox"/> 통합교육지원청 (4과 1지역센터) </div> <table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d>학 교: 177교</td></tr> <tr><td>학 생: 36,515명</td></tr> <tr><td>교 원: 3,163명</td></tr> <tr><td>공무원: 81명</td></tr> <tr><td>폐지교육청인력 4%감</td></tr> </table>	학 교: 177교	학 생: 36,515명	교 원: 3,163명	공무원: 81명	폐지교육청인력 4%감
학 교: 117교																	
학 생: 33,743명																	
교 원: 2,670명																	
공무원: 55명																	
학 교: 60교																	
학 생: 2,772명																	
교 원: 493명																	
공무원: 43명																	
학 교: 177교																	
학 생: 36,515명																	
교 원: 3,163명																	
공무원: 81명																	
폐지교육청인력 4%감																	

1+2 통합 : 가장 규모가 큰 교육지원청에 2개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합



참고4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 주요내용

I 추진 배경

□ 학생수 감소 및 교통·통신 발달 등 지방교육행정 환경 변화

- 저출산 등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역 최소단위 지방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 소규모화 가속
- 소규모 교육지원청 증가는 고비용 저효율 행·재정 구조 등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 가중 □ 소규모 교육지원청 자발적 구조조정 노력의 한계
- 기관장(교육장) 및 공무원 정원 감소 등 조직 축소에 따른 불이익 우려 등으로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통·폐합에 부정적 입장
-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반발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교육청 스스로의 합리적인 성과 창출에는 한계

⇒ 우리부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지원청 구조조정 정책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교육청의 자발적인 교육지원청 통·폐합 노력 견인 필요

※ 감사원,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 및 유도방안 마련 요구('15)

- 행정구역 통합 등에 따른 자율적 교육지원청 통합 추진('06~'07)
 - ※ (행정구역 통합) 북제주·제주시 통합('06) / (자율통합) 부산 동부·남부교육청('07)
- 교육부, 교육지원청 통·폐합(인구 5만명, 학생 5천명 이하) 추진('08.5.)
 - 이해관계자 반대 등으로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연계 추진으로 전환('08.12.)
- 창원, 청주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교육지원청 통합('10.7~'14.7)
 - ※ 마산·창원·진해 통합에 따른 창원교육지원청('10.7),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청주교육지원청('14.7)
- 감사원, '15년도 '지방교육재정 실태' 감사 및 '지방교육청 재정운용 실태' 감사 결과 처분 요구('15.3~10)
 - ※ 교육지원청 유지를 위한 최소 관할 학생수 기준 등 통·폐합 유도방안 마련('15.3) 및 교육지원청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통·폐합 기준 및 유인 방안 마련 통보('15.10)
- 시도교육청 조직·정원 효율화(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유도 등)를 위한 정책연구 추진(한국지방교육연구소, '15.5.~12)

< 최근 10년간 교육지원청 통·폐합 현황 >

구분	통합 전	통합 후	통합 사유	행·재정 지원	통합 일자
제주	제주교육청	제주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시·군 통합에 따른 교육청 통합 (행정구역 통합)	36억원	'06.7.1
	북제주교육청				
부산	동부교육청	남부교육청	-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성 제고 (자율 통합)	140억원	'07.3.1
	남부교육청				
경남	창원교육지원청	창원교육지원청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 (행정구역 통합)	150억원 2센터 설치	'10.7.1
	마산교육지원청				
	진해교육지원청				
충북	청주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 (행정구역 통합)	1센터 설치	'14.7.1
	청원교육지원청				

1 교육지원청 일반 현황

- (법적 근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 5조, 별표2 등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두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교육감이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교육지원청 설·폐 요구 시, 우리부에서 검토하여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관할구역·명칭 변경)을 통해 설·폐
- (법적 성격) 1개 또는 2개 이상 구·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64년부터 설치)
 - 176개 교육지원청 10,619명(전문직 2,158명, 일반직 8,461명) 근무('15.12.31기준)
 - ※ 시지역은 대부분 2~3개 기초지자체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 설치(31개 중 28개), 도지역(제주 제외)은 대부분 기초지자체별로 설치(143개 중 134개)
- (기능) 유·초·중학교(고교 일부 사무)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조직 등) 인구수 및 학생수 기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구 설치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기준

구분	인구수	학생수	국·과·센터	기관 수
기구 설치 기준	인구 50만 이상	학생 5만 이상	2국	44
	인구 30만 ~ 50만	학생 3만 ~ 5만	4과 2센터	13
	인구 15만 ~ 30만	학생 1.5만 ~ 3만	3과 2센터	21
	인구 10만 ~ 15만	학생 1만 ~ 1.5만	2과 2센터	15
	인구 10만 미만	학생 1만 미만	2과 1센터	81

② '소규모 교육지원청'(정책 대상) 범위 설정

- 법령상 기구설치 기준, 교육지원청 학생 수에 따른 효율성 분석 등을 검토하여 소규모 교육지원청 범위 설정

- ① 법령상 설치 가능한 최소 기구 기준인 2과1센터(인구 10만 미만, 학생 1만 미만) 교육지원청
- ② 학생수 변화에 따른 효율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관할 학생수 3천명 이하 교육지원청

⇒ 관할지역의 학생수 3천명 이하(인구수 3만명 이하)인 소규모 교육지원청(2과1센터 및 군단위 소재)을 정책대상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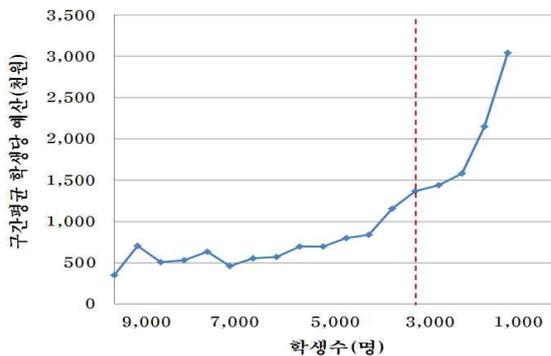
※ 대상 : 25개청(경북 8, 전북 5, 전남 4, 강원 3, 충북 2, 경남 2, 충남 1, '16.현재 기준)

< 교육지원청 학생수에 따른 효율성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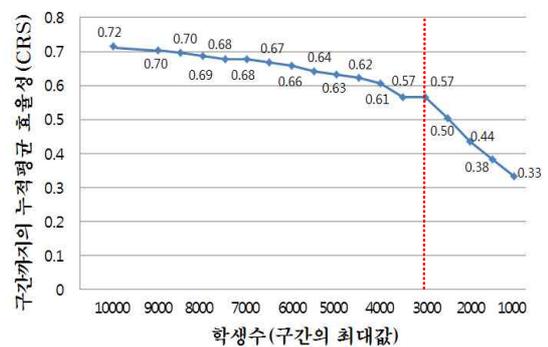
- 교육지원청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구간 평균 학생당 예산은 증가하며 학생 수 약 3천명부터 크게 증가
- 교육지원청 학생 수가 적을수록 누적평균 효율성*은 완만히 감소하나, 학생 수 3천명 이하에서 급격히 감소

※ 효율성(CRS) 분석 : (투입요소) 공무원수, 예산, (산출변수) 학생수,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에 따른 구간별 평균 학생당 예산 변화>



<학생수에 따른 구간까지의 누적평균 효율성 변화>



※ 출처 : '교육행정 수요변화를 반영한 교육지원청 조직 합리화 방안' 정책연구(한국지방교육연구소, 2015)

1.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기준 개선

❖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 절차 및 행·재정 지원 근거 등을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하여 교육청의 자발적 통·폐합 유도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별첨)

- (기구설치 하한선 설정) 3년 연속 인구수·학생수 각각 3만명·3천명이 하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한선 설정
 - 학생수 감소로 과를 설치할 수 없는 교육지원청(센터 규모) 수준으로의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의 자발적 통·폐합 노력 촉발 기대
- (학생수 기준 강화) 기구설치 시, 인구수 대비 10%인 학생수 기준을 10~13%로 강화(만명 단위로 설정)*하여, 학생수 변동에 따른 효과적 조직변화 유도
 - * 우리나라 인구대비 학생 비율 약 12% ('15.4기준 인구수 50,617천명, 학생수 6,089천명)
 - ※ 인구15만/학생 1.5만→인구15만/학생2만, 인구50만/학생5만→인구50만/학생6만 등으로 변경
- (기구 자율축소 유도 등) 과 설치 수 기준을 ‘0과 이내’로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교육청 자율로 기구 축소 운영이 가능토록 개선
 - 현행 ‘과’와 ‘센터’는 구분 실익이 낮고, 개별법령으로 설치한 센터(소속기관 성격)와 혼돈을 초래하는 문제 등 개선을 위해 센터를 과로 통합하되,
 -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등)는 기구 설치 기준과는 별도로 설치 가능하므로 1과 감축
- (행·재정 지원) 교육감은 필요시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교육지원청 통·폐합 등 효율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는 행·재정 지원

2. 교육지원청 자율 통·폐합 기준 및 절차 마련

❖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관련 규정 정비와 병행하여, 시·도교육청의 자발적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노력 유도를 위한 행·재정적 기준 및 지원방안 마련

□ 통·폐합 대상 소규모 교육지원청 선정 기준

-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미만, 학생수 3천명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과'를 설치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향에 맞추어, 이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을 우선 선정

□ 자율 통·폐합에 따른 행·재정상 인센티브

- (특별교부금) 통합지역 교육사업 및 여건 개선을 위해 통·폐합에 따른 인건비·기관운영비 절감, 타 교육청 파급 등을 고려하여 지원

- 산식에 따라 산출된 지원금액은 4년 간 분할 지원(기관 당 약 55~100억원 규모)

※ '07년 부산 동부·남부교육청 통합 시 지원규모 산식*에 따라 140억원 지원한 사례를 적용(인건비·기관운영비는 전년도 결산액 기준)

* 지원규모 산식 : (폐지교육청 인건비×70% + 기관운영비×65%) × 4년

- (총액인건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산정 시, 교육청 폐지 시점에서 4년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이후 폐지교육청 정원의 40% 감축** 반영)

*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지자체 통합 시 4년 지원 사례 적용

** 청주·청원교육지원청 통합 사례(정원 40% 감축) : 통합전('13) 청주 96명, 청원 52명 → 통합후('15) 125명(52명중 23명 감축(44.2%))

- (한시 정원) 교육지원청 통·폐합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청에 '교육지원청 통합추진단(한시기구) 설치 시 한시정원(단장 4급)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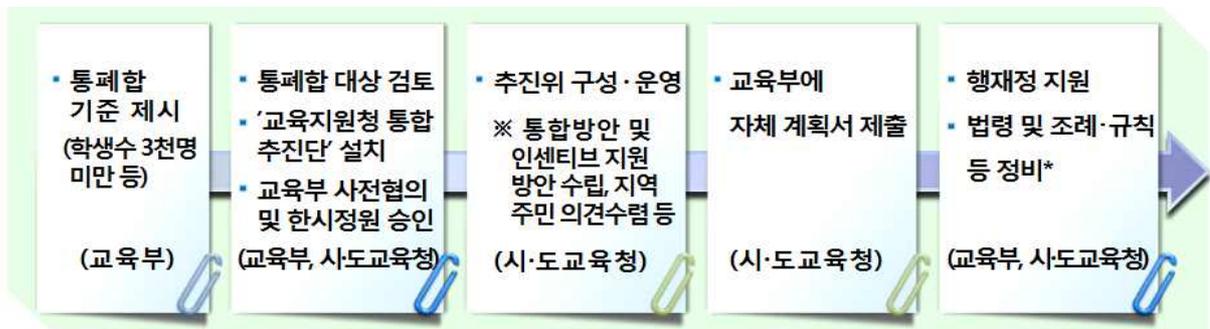
- (교육지원센터) 폐지되는 교육지원청 지역에 가칭 '교육지원센터' 설치를 허용(센터장 5급 상당)하여 지역 근거리에서 학교현장 등 지원

- (평가 반영)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 및 '재정운용 성과평가' 등 지표에 교육지원청 통·폐합 노력도 반영('17년~)

□ 자율 통·폐합 추진 절차

- (교육청) 교육지원청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교육지원청 효율화 방안,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 교육청 폐지 지역 지원 계획 등 종합계획(교육지원청 효율화 계획) 수립
- (교육부)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효율화 계획' 제출 시, 행·재정 지원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추진

< 교육지원청 자율 통·폐합 추진 절차 >



* (교육부) 교육자치법시행령 (교육청) 정원조례·규칙, 행정기구조례·규칙 등

3. 교육지원청 통·폐합(효율화) 시범사업 추진

❖ 우수모델 발굴·확산으로 시·도교육청의 자발적 교육지원청 통·폐합 노력을 유도 및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추진

- (대 상) 통·폐합 대상 소규모 교육지원청 선정 기준(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미만, 학생수 3천명 미만)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 중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2~3개 기관 선정
- (기 간) '16. 9. 1 ~ '17. 8. 31(1년간)

- (주요 내용) 통합 및 폐지 교육지원청 간 기능·업무 조정,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센터 설치, 기존시설 활용방안 수립·추진 등
 - 시범 기간 중 중간보고회 및 환류 등을 통해 통·폐합 우수모델 발굴·확산 및 시범 종료 후 통합 유지로 실질적 성과 도출
 - (인센티브) 교육지원청 자율 통·폐합 시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적용하되, 한시정원 및 특교지원액 추가 부여
 - 통합 교육지원청의 업무량 및 통솔범위 등 확대에 따라, 시범실시 기간 동안 4급(상당) 지방공무원 1명 한시정원 인정
 - 폐지 지역의 교육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은 시범사업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해 자율 통·폐합 지원액의 120% 수준 지원
- ※ 시범년도에는 특별교부금 지원액의 10~20% 정도 우선지원

< 시범사업 추진 절차 및 일정 >

시범사업 대상 선정	시범사업 안내 (‘16. 5월)	희망교육지원청 신청 (‘16. 5월 ~ 7월)	지역별, 규모별 현황 등 검토 후 대상 선정 (‘16. 8월)	
시범사업 실시	시범사업 실시 (특별교부금 지원 ‘16. 9월)	중간보고회 (‘17. 2월)	개선방안 등 도출·환류 (‘17. 3월)	시범사업 종료 (‘17. 8월)
타 시·도 확산	통·폐합 우수모델 제시 (‘17. 9월)		타 시·도 확산 (‘17. 9월~)	

V 기대 효과

- 학생수 감소에 대해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등 선제적 대응 가능
- 적정규모의 교육지원청 유지(인력 증가)로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 제공
-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절감은 학생들의 교수-학습지원비

VI 향후 추진 일정

- '교육청 기구설치 개선' 관련 대통령령* 개정 등 추진('16.5~)
 - 교육청 의견수렴('16.5)→입법예고('16.5~6)→법제심사('16.7)→차관·국무회의('16.8)→공포·시행('16.9)→자율 통·폐합 기준 등 제시('16.9)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교육지원청 통·폐합(효율화) 시범사업 실시 추진('16.6~)
 - 시범사업 안내('16.6)→교육청 신청('16.6~7)→대상 선정('16.8)→시범 실시('16.9~)→중간보고회('17.2)→시범종료 및 타시·도 확산('17.8)

미래부, 농·어민 대상 무료 정보화교육 본격 추진
- 농번기·출어기 고려, 10,000명 대상 연중 교육 운영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정보화에 소외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무료 정보화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농·어민의 경우, '2015년 정보격차실태조사' 결과*, 다른 계층에 비해 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교육사업의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 PC기반 정보화 수준 : 결혼이민자(87.8%) > 저소득층(87.7%) > 장애인(86.2%) > 장노년층(77.4%) > 농어민(72.2%)
 - * 스마트 정보화 수준 : 저소득층(74.5%) > 결혼이민자(73.1%) > 장애인(62.5%) > 장노년층(56.3%) > 농어민(55.2%)
 - 이번 사업에서는 연간 10,000명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교육과 스마트폰·SNS활용뿐만 아니라 농어민의 생계소득에 영향성을 높일 수 있는 UCC동영상, 카페·블로그 제작 등 특화과정을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선정된 교육기관은 최대한 연 9개월, 월 2개 과목, 과목당 30시간의 교육을 기준으로 전문강사와 교재를 무료로 지원 받게 된다.
 - 미래부는 수강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이 농번기나 출어기 등에 교육 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무료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농어민 정보화교육 추진 >

- ◇ 교육대상 : 전국 읍·면소재 기관, 단체(PC 5대 이상 보유 시설)
- ◇ 교육목표 : 연 10,000명
- ◇ 교육신청 : 국민정보화교육사이트(ww.itstudy.or.kr)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농어민 정보화교육 담당(☎ 064-909-3014)
- ◇ 신청기간 : '16.4~12월(수시)
- ◇ 교육과정 : 기초교육(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특화교육(SNS, 블로그, 홈페이지 등)
※ 교육과정은 지역 환경에 따라 협의하여 진행 가능

- 한편, 정보화교육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진흥원')과 농어업인 인력양성 전문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업무협약(MOU)을 통해 농어업인 정보화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공동 사업 발굴 등 상호 업무지원에 최대한 협력하기로 했다.
- 미래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농어업인 정보화교육이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관련 부처·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국립과천과학관 식용곤충 특별기획전 『곤충 고소애는 고소해!!』 개최
- 미래 식량자원으로의 곤충 이해 및 곤충산업 소개 -

-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조성찬)은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식용곤충특별전 ‘곤충 고소애는 고소해!!’를 개최한다.
 - ※ 고소애 : 농촌진흥청에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 ‘갈색거저리(mealworm beetle) 애벌레’ 애칭
 - 이번 특별전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래 유망 식량자원으로 주목 받고 있는 ‘곤충’을 선입견 없이 식소재로 받아들이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립농업과학원과 공동으로 기획하였다.
 - ※ 2013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곤충을 기아퇴치, 영양보충,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미래식량 1순위로 지목하고 인류, 가축, 애완동물 식량으로 적극 권장
- 전시는 ‘곤충의 생물학적 특징’과 ‘먹거리로서의 곤충’을 이해하기 쉽도록 관찰과 체험이 가능한 4개의 코너로 구성하였다.
 - ‘식용곤충과 함께’ 코너는 곤충의 생물학적 특징과 곤충이 먹거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준다.
 - 4억 8천만 년 전 지구상에 처음 나타난 곤충과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진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곤충 한 살이를 표본과 함께 전시한다.
 - 곤충을 직접 관찰하고 만져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있다.
 - ‘세계의 곤충요리’ 코너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곤충을 재료로 한 식제품과 곤충요리를 전시한다.
 - 관람객은 곤충이 영양적으로 우수하고, 세계의 다양한 식재료와 잘 어울린다는 것을 전시품을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 곤충을 사용한 한식, 양식, 디저트(푸딩, 사탕 등) 실물 및 모형 전시
 - ‘미래식량, 곤충!’ 코너는 곤충이 미래식량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와 우리나라에서의 곤충산업을 소개한다.

※ 곤충은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량자원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대량 사육 가능
- 또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곤충성분 식제품,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을 전시하여 곤충이 고부가가치 산업소재임을 보여준다.

※ 우리나라 곤충시장의 규모는 2009년 1,600억에서 2015년 3,000억으로 빠르게 증가

- 갈색거저리 애벌레 ‘고소애’를 맛볼 수 있는 시식코너도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벼메뚜기, 누에(번데기, 백강잠), 고소애(갈색거저리 애벌레), 쌍별귀뚜라미는 일반식품원료로,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꽃뱅이)와 장수풍뎅이 애벌레는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

○ ‘오물조물 조리교실’은 초등 저학년(1~3학년) 대상으로 곤충요리를 직접 만들어서 먹어볼 수 있는 체험코너이다(주말과 공휴일 1일 2회 운영).

※ 국립농업과학원과 경민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김수희 교수)에서 개발한 조리법을 활용하여 김수희 교수팀 운영

□ 국립과천과학관 담당자는 “이번 특별전은 다양한 곤충을 관찰하고 미래식량 대체자원으로 곤충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식용곤충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과 이벤트도 있으니 많은 관람객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방송인 이용식 씨의 이벤트(6월 6일)를 비롯해 국립농업과학원 윤은영 박사(6월 18일)와 국립생물자원관 김태우 박사(7월 2일)의 특강 예정

□ 과천과학관 입장 관람객이면 누구나 관람하고 체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시해설과 체험교실은 현장예약),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www.sciencecent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국립과천과학관 식용곤충 특별기획전 『곤충 고소애는 고소해!!』 관련 자료

식용곤충 특별기획전 '곤충 고소애는 고소해!!'



식용곤충과 함께!



- 곤충의 생물학적 특징
- 식용곤충의 역사 (먹거리가 되기까지)

세계의 곤충요리



- 세계의 곤충요리 및 조리법 소개
- 곤충재료 가공식품, 의약품, 화장품 소개

미래 식량, 곤충!



- 관찰하고! 먹어보고!
- 곤충의 산업화
- 유아식과 환자식으로의 변신

오물조물 조리교실



- 곤충요리를 직접 만들고 먹어보는 체험 (초등1~3학년 대상, 주말·공휴일 운영)

체험 프로그램 안내

<전시해설 및 시식체험>

- 전시해설 : 10:30 ~ 11:00, 13:20 ~ 13:50
- 시식체험 : 11:30 ~ 12:00, 15:20 ~ 15:50
- 참가대상 : 상설전시장 관람객 누구나

<조리교실>

- 14:00 ~ 14:50(1회), 15:30 ~ 16:20(2회)
- 참가대상 : 초등 1 ~ 3학년
- 운영기간 : 주말(토, 일), 공휴일(6월 6일, 현충일)

* 전시해설 및 조리교실은 기획전시장 안내데스크에서 선착순 체험표 배부(10:00부터 ~)

<이벤트 및 특강>

- 6월 6일(10:00~12:00) : 곤충요리사 뽀식이와 함께 (포토존)
- 6월 18일(14:00~14:50) : [특강] 미래식량, 왜 곤충인가?
- 7월 2일(14:00~14:50) : [특강] 곤충과 인간

포스터

식용곤충 특별기획전

곤충 고소애는 고소해!!

2016. 6. 3(목) - 7. 3(일)



주최·주관 | 국립자연과학관 국립농업과학원

유해한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 전면 교체한다

- 2016년 6월~10월, 공공체육시설 유해성 조사 실시 및 개·보수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더욱 안전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조사를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

유해성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조잔디의 품질기준(OKS 3888-1)에 따라 인조잔디 과일(잎)과 충전재(고무알갱이)에 포함된 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유해원소의 함량을 측정하여 유해성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문체부는 2013년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1,037개소에 대한 유해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교육부와 공동으로 472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161개 학교의 운동장 인조잔디를 전면 교체하였다.

이번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운동장 전수 조사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전면 교체에 이은 후속 조치로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소관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 운동장 2,703개소 중, 유해성 안전 기준이 제정된 2010년 이전에 설치한 1,167개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안전점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된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주변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도 7월부터 지자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함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유해성 조사를 실시한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유해성 기준(안전기준)을 초과한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은 교육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개·보수 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광통역안내 서비스 질 제고 추진

- 세계문화유산, 동계스포츠 등 전문 해설사 양성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김종덕)는 세계문화유산 등 고부가 관광상품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관광통역안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첫째,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경력 3년 이상의 관광통역안내사를 대상으로 세계문화유산과 동계스포츠관광, 의료관광을 전문적으로 해설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 기간은 10일(70시간)이며 과정별 인원은 50명이다. 의료관광 관련 교육은 지난 3월에 마무리되었고, 세계문화유산 과정과 동계스포츠관광 과정은 하반기(10월, 11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해당 교육 이수자에게 고품격 관광상품에 대한 통역안내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친절하고 올바른 통역안내 시스템 구축

둘째, 외국인에 대한 환대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통역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역사 교육 및 친절 교육을 오는 11월까지 시행한다. 해당 교육은 이론보다는 현장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 기간은 4일(24시간), 교육 인원은 1,700명이다. 문체부는 2017년에 교육 인원을 2,5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셋째, 고품격 관광안내를 위해 경복궁 등에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거친 궁 전담 관광통역안내사를 배치한다. 현재는 경복궁과 민속박물관에 15명의 관광통역안내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문체부는 2017년에 다른 궁까지 확대하여 총 40명의 전담 관광통역안내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넷째,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신규 관광통역안내사의 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궁 현장 교육'을 강화한다. 이 교육은 신규 통역안내사의 올바른 통역안내와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며, 교육은 연중

계속(경복궁, 매일 10시) 진행된다.

청년 통역안내사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다섯째, 미취업 관광통역안내사(34세 이하)에 대한 인턴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1차로 후보자를 선발했고, 1차로 선발된 25명은 3개월간 직무교육을 거쳐 5월부터 여행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문체부는 6월 중 추가 인원(30명)을 선발하여 10월 중에 그들이 업계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와 청년희망재단, 협력여행사가 공동으로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문체부는 선발된 인턴에 대해 월 80만 원(3개월)의 인건비를 보조하고 2020년까지 300명의 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다.

무자격 통역안내사 근절을 위한 시스템 개선

여섯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의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자격증을 전자카드로 전면 교체한다. 교체 카드에는 직접회로(IC) 칩이 내장되어 단속 공무원이 스마트폰으로 자격증의 위·변조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무자격 관광통역안내 방지와 자격증의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이 오는 8월 4일(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변화하는 관광 흐름(트렌드)에 맞게 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광종사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해 한국관광의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농식품산업 유망 일자리 한 자리에 모인다.

- '16 귀농귀촌 일자리 및 창업 박람회 개최 -

《 주 요 내 용 》

◆ 박람회 개요

- (행사목적) 농식품 기업 채용, 창업컨설팅 및 귀농귀촌 지원
 - ① 농식품 유망직업 소개, 창업 컨설팅 및 기업 채용관 운영,
 - ② 귀농·귀촌 지원, ③ 6차산업, 스마트팜, 애그로테크 등 미래 농업 소개
- (일시/장소) '16.6.3(금) ~ 6.5(일)/서울, 서울무역전시관(SETEC)

◆ 박람회 행사장 구성

- (스마트창업관) 채용정보, 벤처창업, 기술이전 및 창업컨설팅
- (미래농업관) 6차산업, 스마트팜, 농업용 로봇 등 미래 농산업 소개
- (지역정보관) 지자체별 귀농귀촌 정보 제공 및 상담

◆ 박람회 주요행사

- (창업지원) 지자체 정책 발표회, 농식품 기업 창업 특강, 창업 설명회, 일자리 창업 강의 등 세미나 개최
- (부대행사) '청춘農담 토크콘서트', '빅마마 요리교실', 'Job concert' 및 '창업 오디션' 등 개최

1. 행사개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6 귀농귀촌 일자리 창업박람회'를 '16.6.3일~5일까지 서울무역전시관(SETEC)에서 개최한다.
- '귀농귀촌 미래농업을 리딩하다!'라는 주제로 농림수산식품문화정보원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 중앙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기업체 등 전국 150여개 기관이 참가하는 귀농귀촌 및 농식품 일자리 관련박람회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 이번 행사는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과제인 농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농식품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농식품 기업 취·창업 상담과 함께 **미래 농식품 유망직업** 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보와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귀농·귀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과 상담을** 진행한다.

2. 박람회장 구성

박람회장장은 '스마트창업관', '지역정보관', '미래농업관' 등 3가지 테마 전시관으로 기획·운영된다.

- '스마트창업관'에는 농식품 관련 기업 등 65개 기업이 참여한다.
 - 스마트창업관은 ▲창업사례, ▲창업정보 제공, ▲일자리 채용정보, ▲신기술 소개 및 기술이전 상담, ▲전문가와의 1:1 상담, ▲6차산업 우수업체 체험 등 총 6개의 테마로 구성되며,
 - 농고·농대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미래 농식품분야 유망 일자리를 제시하고 진로를 조언하는 컨설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지역정보관’에는 귀농귀촌을 주제로 67개의 지자체가 참여한다.

- 참여 지자체는 120여개의 부스를 통해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지원정책 및 상담을 진행한다.

□ ‘미래농업관’에는 농식품부와 농진청 등을 중심으로 미래 농업의 비전을 제시한다.

- 농업용 로봇, 미래농촌, 스마트팜, 6차산업 모델 마을, 대기업관 등으로 구성되며, 반려동물산업·말산업·곤충산업 등 농식품분야 미래 유망 직업도 소개한다.
- 유관기관의 다양한 정책사업소개, ICT 컨설팅 등 귀농창업에 위한 상담과 컨설팅 행사가 진행된다.

3. 박람회 기간 중 주요행사

3일간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청춘농담 토크콘서트, job 콘서트, 요리교실, 농식품 창업 입점 오디션, 농고농대 진로컨설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풍성한 체험거리와 함께 펼쳐진다.

□ (1일차, ‘16.6.3) 행사 첫날에는 젊은 참여자를 주요 대상으로 일자리 관련 행사가 펼쳐진다.

- 대기업 및 농식품분야 기업 인사담당자를 초청해서 농업관련 기업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인재상 소개, 취업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Job 콘서트가 개최되고,
-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귀농귀촌에 관한 이야기를 토크 콘서트 형태로 진행하는 청춘농담 토크콘서트 등이 펼쳐진다.

□ (2일차, ‘16.6.4) 유망 농식품 분야의 창업지원과 관련한 행사를 중심으로 일정이 진행된다.

- 창업관 전시 참가업체가 창업제품을 소개하고, 제품 홍보와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는 농식품 창업 입점 오디션이 펼쳐진다.
- 국내 유명 셰프인 빅마마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채로운 레시피를 특유의 구수한 입담과 함께 맛깔나게 풀어내는 이벤트도 개최된다.

□ (3일차, '16.6.5) 농식품 진로 컨설팅과 창업 컨설팅이 개최된다.

- 농고농대생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업 취업 선배들의 성공사례 토크쇼가 진행되고
- 귀농창업에 성공한 농업회사법인 (주)젊은농부들 이석무 대표와 영농조합법인 애농 천춘진 대표가 귀농창업 방법과 성공스토리 제공을 통해 귀농귀촌 및 창업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4. 행사의 의미 및 당부사항

□ 이번 행사는 그간의 귀농귀촌 행사를 넘어 농식품기업 등의 참여를 통해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다.

- 특히, 농고농대생 등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미래세대를 위한 취·창업과 연계한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 뿐 아니라,
- 미래농업의 비전 제시를 통해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우리 농업에 대한 공감과 소통을 강화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단순 정보제공에 머물던 행사와는 달리 농업용 로봇, 드론, 농촌 가상체험(VR)존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갖추어진 흔치 않은 경험의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 “GS리테일, 풀무원, 일양약품 등 65개 기업들이 참여한 만큼, 농식품 취창업 및 귀농귀촌 등 관람객의 관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기타 ‘2016 귀농귀촌 일자리 창업 박람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사 홈페이지 (returnfarmexpo.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목 적

- 농식품분야 미래 유망 일자리 소개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 농식품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 컨설팅을 연계하여 귀농창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일자리 창출 지원
- 농업·농촌의 미래 비전 제시를 통한 농업·농촌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을 통해 농업·농촌의 활력 증진에 기여

2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6 귀농귀촌 일자리 창업 박람회
- 주 제 : 귀농귀촌, 미래농업을 리딩하다!
- 슬 로 건 : 귀농귀촌, 희망·행복·미래를 담다!
- 행사기간 : 2016. 6월 3일(금) 10시 ~ 6월 5일(일) 17시 / 3일간
- 행사장소 : 서울무역전시장(SETEC) 제 1·2·3 전시장
- 참여대상 : 정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유관기관·단체
-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후 원 :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마사회, NH농협

3

기본 방향 및 추진전략

- (기본방향)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창업박람회를 운영, 농식품분야 유망 일자리를 소개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미래 비전 제시
 - 농식품분야 기업 및 농식품벤처기업, 창업기술이전 관련 기관 유치, 귀농귀촌 정보제공·상담 및 창업컨설팅과 일자리 창출 연계

< 박람회 행사 개선 사항 >

구분	기존	개선
참여 기관	○ 농식품관련 기업, 법인 단체	○ 농식품관련 기업, 법인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창업기술이전 관련기관 유관기관 참여 확대
컨텐츠	○ 귀농귀촌정보, 일자리 창업사례 공유	○ 귀농귀촌정보, 6차산업, 스마트팜&ICT, 창업컨설팅, 농식품분야 유망 미래 일자리 소개, 미래성장분야 농업컨텐츠 강화 ○ 농기계 시뮬레이터, 농촌가상체험(VR), 터치스크린, 드론 등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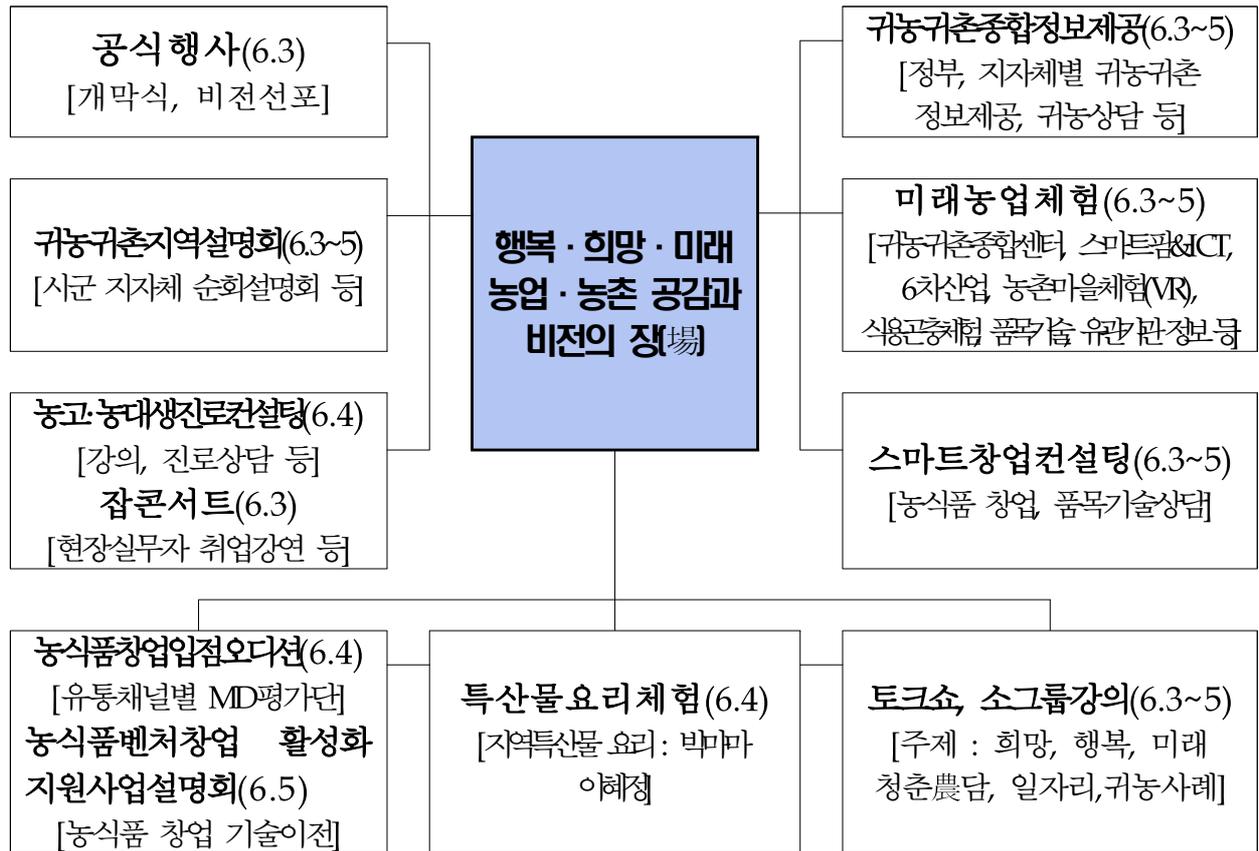
- (추진전략) 콘텐츠를 주제별·섹션별로 배치하여 관람객 만족도 제고
 - 귀농귀촌 전문상담과 농식품벤처 창업상담, 일자리 및 직업 컨설팅, 창조농업 비전 제시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여 박람회 성과창출

[전략1 : 희망]	[전략2 : 행복]	[전략3 : 미래]
스마트 창업관 (3관) (65개 업체, 197개 부스)	지역정보관(1관) (73개 지자체, 130개 부스)	미래농업관 (13개 기관, 80개 부스)
○ 농식품벤처 창업정보, 상담 및 컨설팅 ○ 농고농대 농산업 신규 직업소개 및 일자리상담 ○ 농산업 관련 기업 잡콘서트	○ 각 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 및 상담정보 제공 ○ 지역정보 소개, 귀농귀촌 사례 소개 ○ 지역별 귀농귀촌 순회 설명회, 소그룹강의 등	○ 6차산업, 스마트팜&ICT 모델 전시 ○ 드론 농촌체험 VR, 귀농귀촌실행 터치스크린 운영 ○ 애그로테크, 품목별기술 컨설팅 ○ 농식품분야 미래 유망 일자리소개, 산림정보제공

4

행사 및 전시장 구성 개요

□ 행사 프로그램



□ 전시관 전체 구성안

스마트창업관(희망)	지역정보관(행복)	미래농업관(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막식, 농식품 벤처 창업, 창업 정보관&상담관, 농고농대 농직업소개, 농산업 일자리 안내 등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 및 상담정보 제공, 지역 정보, 지역별 귀농귀촌설명회, 소그룹강의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팜, ICT, 6차 산업 모델, 귀농귀촌종합센터 전시, 체험형 부스 구성, 귀농·교육상담, 품목기술 컨설팅 등 진행
전시&상담&체험	전시&상담	전시&상담&체험

□ 전시장 구성

메시지	아이템	구성내용
지역 정보관 (1관)	지자체 홍보·상담서비스	지자체별 지원정책 및 정책홍보, 지역정보, 1:1상담
	지역별 귀농귀촌 설명회	시군 지자체별 귀농귀촌 순회 설명회(12개 시·군)
	한눈에 보는 귀농·귀촌 지역정보	지도로 보는 전국의 귀농귀촌 지원정보(유망품목 등)
미래 농업관 (2관)	귀농 귀촌 종합센터	귀농·귀촌에 관한 종합정보 및 상담, 귀농교육상담
	beyond farm	6차산업 홍보 및 사례, 자문
	미래 농업 체험관	트랙터시뮬레이터, 드론 체험
	스마트팜관	에너지온실, 스마트팜&ICT 상담
	곤충 체험관	식용곤충 시식 및 체험
	농촌 마을 체험관	다양한 농촌마을 체험관(VR)
	유관기관 및 단체관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유통공사, 마사회 등 정보 제공
	품목기술컨설팅 및 귀농귀촌상담	농업마스터의 품목기술 컨설팅 및 귀농교육 1:1상담
	미래농업유망일자리	미래의 다양한 농산업 일자리 및 유망직업 소개
스마트 창업관 (3관)	창업정보존+감동상담존	농산업분야 기술이전 및 창업 노하우, 정보 제공
	업체 전시 World	창업상담 및 정보제공
	일자리 World	농식품 관련 대기업 및 중소기업 일자리 정보,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등 일자리 연계 플랫폼 실시간 구인 구직
	구멍가게	즉석빵, 음료 등 업체별 제품 생산물 전시
	심쿵아이템관	농식품분야 신기술 소개, 기술이전 상담
	체험존	쌀점토, 반려견체험, 식용곤충 등 6차산업 우수업체 체험
	입점오디션	창업관 전시업체(일자리, 체험, 업체전시 World) 중 입점 용이한 제품 선정
	창업설명회	농산업체 창업지원 정보 제공

* VR [Virtual Reality] : 사용자가 컴퓨터로 생성된 가상의 공간에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데이터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상의 공간

5

일정별 행사 프로그램(안)

일시		프로그램	비고
6.3 (금)	10:45~12:10	개막식, VIP 전시장 투어	식전행사, 테이프 커팅
	12:00~13:00	VIP 오찬	행사장 인근 식당(삼원가든)
	13:00~14:00	청춘 農담 토크 콘서트	연암대 채상헌 교수
	14:00~17:00	한국경제신문 Job-concert * 농식품관련 기업 취·창업 희망 관람객 대상, 기업 인사담당자 초청 강연	
6.4 (토)	11:00~12:00	빅마마 농산물 요리 특강	우리 농산물 소개 및 요리 레시피 설명, 시식 체험
	13:00~15:00	농식품 창업 입점 오디션 * 창업관 전시 참가업체 대상 유통채널 MD 평가단 오디션 형태 제품 평가 등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5:30~16:30	농고농대 진로컨설팅 * 농고·농대생 대상 농업의 미래상 제시, 전문 커리어코치 진로 컨설팅	
6.5 (일)	10:00~12:00	농식품 벤처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설명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3:00~15:00	농식품 기업 창업 특강 * 창업선배가 들려주는 창업 이야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상시	제1 전시장	귀농귀촌 지역 설명회(11:00~16:00)	지자체 지원 사항 설명
		귀농창업 토크콘서트(15:00~17:00)	귀농창업방법, 성공스토리
	제2 전시장	농업마이스터 품목기술 컨설팅(11:00~15:00)	농업마이스터 1:1 컨설팅
	제3 전시장	창업상담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11:00~15:00) *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코리아푸드잡 시스템 활용, 구인구직 정보 매칭	
	현 장	지자체 특산물과 푸드트럭 매칭, 청년 창업모델 제시	지자체 드트럭 3대
귀농귀촌 대상 지역 가상체험 존 운영		VR 체험존 운영	

읍면동 단위 지역 농업정보를 한 눈에,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개시 -

《 주 요 내 용 》

◆ 지역단위 농업정보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스마트농정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서비스」 개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가 스스로 등록한 정보

○ '15년도 경영체 및 농업인 현황(읍면동별, 시군별, 시도별 현황), 재배현황(품목별 노지·시설 재배현황 및 가축·곤충 사육두수) 정보

○ 지역 농업현황에 대한 세부정보 파악이 가능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농정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지역별, 품목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이하 조회서비스)를 '16. 6. 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시군 또는 읍면동 단위의 세부적인 지역 농업현황이 없어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만들거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농식품부는 박근혜정부 5개년 농정계획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농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 경영체 현황을 등록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을 추진해 왔으며, 2015년도 기준 전국 1,589,795 농업인 경영체(농업법인 제외)가 등록되어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가 스스로 자신의 농업경영 상황을 등록한 정보

-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의 “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메뉴를 클릭한 후, 행정전자서명(GPKI) 또는 은행·증권사 등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NPKI) 로그인을 통해 접속하면 된다.
- 조회서비스에는 농업경영체가 스스로 등록한 정보를 기초로, 지역·성별·연령별·농지이용 종류별·재배품목별 등 다양한 농업경영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이를 통해 전국적인 농업 상황과 해당 지역을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농업에 관한 상세한 농업경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특히, 그 동안 농업관련 자료는 시군 또는 시도 수준의 경향 자료 또는 추가 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해 왔으나,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읍면동의 세부 농업상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즉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농식품부 임정빈 정책기획관은 “금번 서비스는 정부3.0 맞춤형 서비스의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지난 3년간의 노력을 구현한 것으로서,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초한 지역중심의 농정 강화, 학계·연구기관의 현장중심 연구 강화 등이 기대되며, 농업 기초 현황 자료를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전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참고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서비스 개요

□ (개요) 농업경영체DB에 등록된 지역별 경영체 정보 조회시스템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와 소속·산하단체, 농진청·산림청, 지자체 등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조회·이용할 수 있도록 집계자료 제공**

* <http://www.agrix.go.kr> - 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메뉴

* 농업인 대상 경영체 정보 우선 제공(농업법인은 등록자료 검증 이후 제공)

□ (제공정보) '15년도 경영체DB 집계 정보(개인정보 제외)

- **현황판** : 전국 지도에 시도, 시군구별 농업경영체 수, 노지면적·시설면적·축산사육규모 현황을 **조회·확인**

구 분	경영체 현황(호, 명)		재배면적(ha)	
	경영체(호)	농업인수	노지	시설
정보규모	1,589,795	2,583,217	1,582,468	77,946

- **경영체 및 농업인** : 지역(경영주 주소, 농지 주소), 성별, 연령, 국적, 농업시작형태, 농업종사형태, 농업종사기간

- **농지이용** : 노지·시설로 구분하여 제공

- 지역별(시도, 시군구, 읍면동)·품목별 재배현황(경영체수, 면적)
- 자경 및 임차, 경지면적, 재배면적 등 상세정보

- **축산·곤충** : 시도별·축종별 사육현황(162,662농가, 사육규모 등)

□ (기대효과) 데이터 기반의 농정 지원을 통한 농정성과 향상

- 지역단위(읍면동) 기초자료 활용을 통한 정책 정합성 제고
- 기존 공문·e-mail 요청 → 시스템 조회로 행정 효율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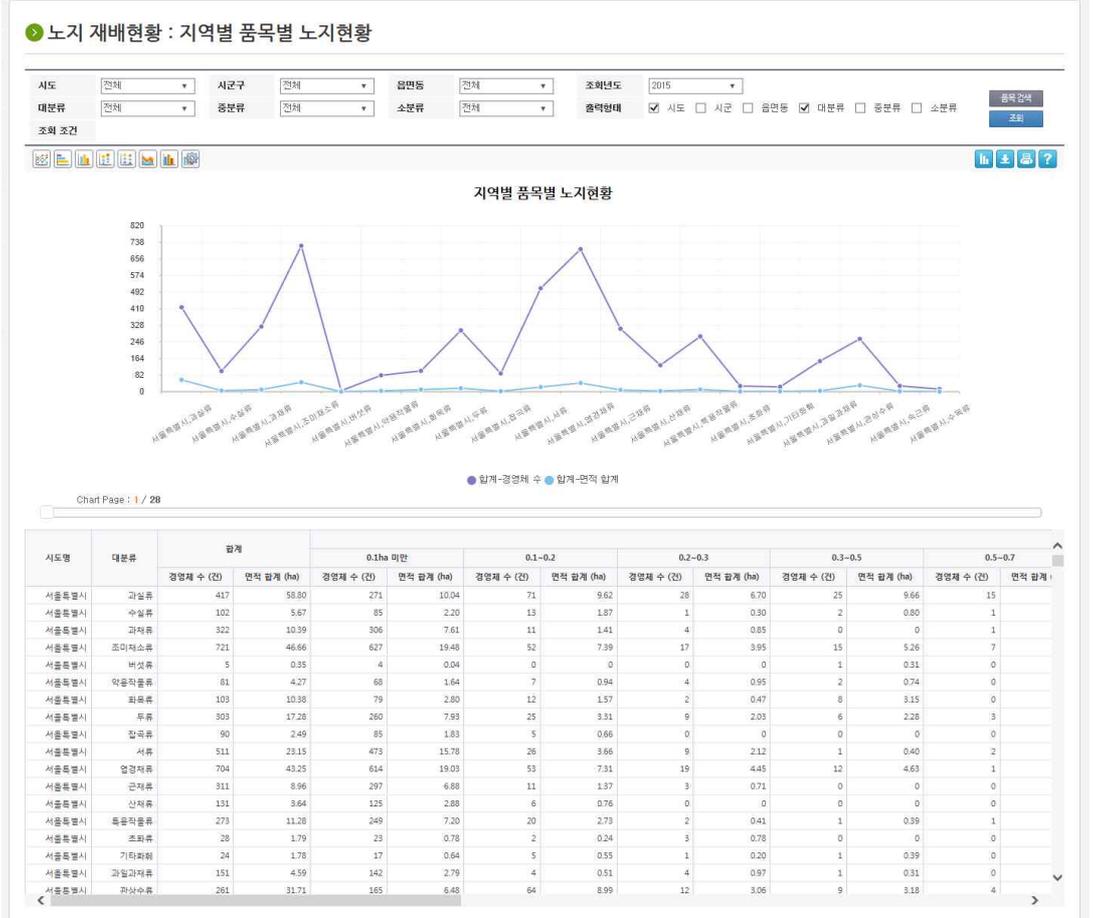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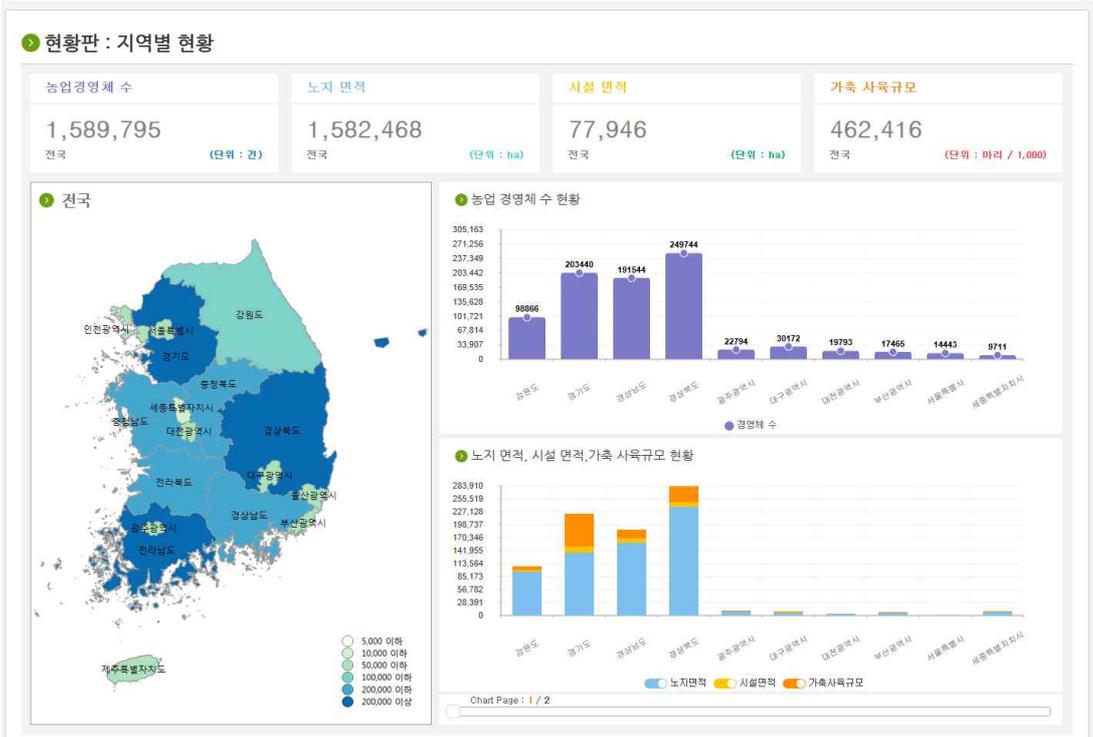
□ (향후계획) 서비스 사용 안내 및 추가 개선작업 추진

-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사용안내 및 홍보(5월, 보도자료 배포)
- 제공 정보 추가,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한 개선작업(~8월)

* (현재) 집계표에 있는 자료 → (8월) 사용자가 직접 항목을 설계·확인

참고2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서비스 화면



평창동계올림픽, 탄소상쇄로 지구 온도 내린다!

◇ 환경산업기술원·평창조직위, 환경올림픽 위한 업무협약 25일 체결

- 2018년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탄소중립의 친환경 올림픽으로 치루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힘을 보탠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는 25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평창사무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탄소상쇄기금 기부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한다.
 -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는 ‘환경올림픽’을 대회 목표로 삼고, 대회 기간 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159만톤의 온실가스를 상쇄하여 친환경 올림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환경산업기술원과 평창올림픽조직위는 온실가스 저감·친환경 소비생활 확산·환경올림픽 홍보의 3대 분야에서 탄소상쇄 협력, 친환경생활 캠페인 전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지원 등 5개 협력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협력을 추진한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해서 탄소상쇄기금 기부처를 운영하여, 선수들을 포함한 올림픽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2008년 람사르총회,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등 국제 행사에서 탄소상쇄기금 모금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으며,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탄소상쇄기금

기부처 운영과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상쇄기금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산정하고 온실가스 상쇄를 위한 기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게 하여 친환경 올림픽 실현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 친환경 소비생활 확산을 위해 양 기관은 친환경생활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고,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 친환경올림픽 경기관람과 친환경 숙소생활을 위한 안내책자 등을 제작하고, 저탄소 생활실천 홍보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와 강원도가 녹색제품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 구매방법, 구매실적 산정 등을 교육한다.
 - 이 외에도 환경산업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차량을 대회기간 동안 지원하는 등 환경올림픽 공동 홍보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 김정주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 환경관리 수준을 전 세계에 선보이는 자리로서, 조직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상표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시설사무차장은 “환경산업기술원과 협력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이 역대 최고의 환경올림픽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1. 환경산업기술원-조직위 업무협약서.
2. 환경산업기술원-조직위 환경협력과제 세부 내용.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환경올림픽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성공적인 환경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하여 양 기관 간에 환경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을 공동으로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 간에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친환경 국제대회 개최에 필요한 환경분야 실천과제 발굴과 이의 실현을 적극 추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당사자) 이 협약의 당사자는 조직위원회와 기술원으로 한다.

제3조(공동협력사업) 협약당사자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하는 사업 분야는 아래 각 항과 같다.

- ① 탄소상쇄 협력, 친환경자동차 보급 협력 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 ②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한 친환경 소비생활 확산
- ③ 환경올림픽 개최를 위한 대·내외 홍보

제4조(추진체계) 양 기관 내에 주관부서(조직위원회는 온실가스관리팀, 기술원은 인증2실)를 두고, 사업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한다.

제5조(회의개최) 공동협력사업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양 기관은 매 반기 별로 순환하여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 기관의 협의 하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비용부담의 원칙) 업무협력 및 공동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기술원 준수사항) 기술원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올림픽 헌장 및 올림픽 정신을 준수한다.

제8조(지식재산의 보호)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대방의 지식재산을 보호한다.

① 협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엠블럼 또는 명칭 등 기타 지식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사용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지식재산과 혼동될 수 있는 유사한 형태를 사용하거나 이를 변형해 사용할 수 없다.

②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제3조의 공동협력사업 이행 시 대회 공식 후원사 이외의 상업적 단체의 브랜드가 일체 노출될 수 없음을 유의한다.

③ 협약당사자는 소속 임직원 및 업무 관련자가 상대방의 지식재산의 가치·신용을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허용할 수 없다.

제9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대회 종료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협약 당사자가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 당사자는 협의를 통해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석 및 변경)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사항은 협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변경 또는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경우,

기술원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본 협약과 관련하여 습득한 대회 및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기밀사항, 본 협약에 의하여 교환되는 사업계획, 기술내역, 각종 문서 등을 상대방 동의 없이 이 협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 누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협약 종료 이후에도 같다.

제12조(법적성격)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 간 상호 협력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제7조 및 제8조, 제11조 이외에는 양 당사자에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제7조 또는 제8조, 제11조 이외의 협약 내용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에 대하여 민·형사 기타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이상의 협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협약당사자가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협약당사자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을 보관한다.

2016년 5월 25일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시설사무차장 김 상 표

환경기술본부장 김 정 주

붙임 2**환경산업기술원-조직위 환경협력과제**

□ 기술원-조직원 간 3대 분야 5개 산업 환경협력과제

분 야	사업내용
온실가스 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상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자동차 보급 협력
친환경 소비생활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생활 캠페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제품 구매 촉진 지원
환경올림픽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올림픽 추진 대내·외 홍보

1. '탄소상쇄 기금'은 무엇인가요?

- 동계올림픽 참가자(선수단, 운영기관, 관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자신이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도록 상쇄 기금을 모금하는 것입니다.
- 참가자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은 '탄소상쇄 기금 산정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탄소상쇄 기금은 나무식재(어린소나무) 비용 또는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기부를 하신 참가자에게는 '온실가스 상쇄기금 기부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2. '친환경자동차 보급 협력'은 무엇인가요?

- 친환경자동차 보급 협력은 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조직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자동차를 조직위에 지원하여 조직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도록 기술원과 조직위가 협력하여 나가겠습니다.
- 또한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의 제품에 대해서는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여 동계올림픽 기간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저탄소제품 인증'은 무엇인가요?

-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하는 '탄소성적표지 제도'로 일상 생활용품, 가정용 전기기 등 모든 제품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 저탄소 상품의 인증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 탄소성적표지 제도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탄소배출량 인증, 1단계) 제품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한 제품에 인증 부여('09.2월~, 1,647개 제품)
 - (저탄소제품 인증, 2단계) 탄소배출량 인증제품 중 저탄소제품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증 부여('11.11월~, 371개 제품)
 - (탄소중립제품 인증, 3단계) 저탄소제품제품 중 표준상쇄활동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영(0)으로 만든 경우 인증 부여('14.9월~, 14개 제품)

1단계. 탄소배출량 인증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



3단계. 탄소중립제품 인증



- (탄소상쇄) 인위적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 양을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을 중립(제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탄소상쇄 방법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양만큼의 숲 조성과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에너지에 투자하는 방법과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여 소각하는 방법 등이 있다.
- (탄소상쇄 기금 산정 프로그램) 동계올림픽 참가자(선수단, 운영단, 관객)들 자신이 배출한 온실가스 양을 계산하여 이에 해당하는 탄소상쇄 기금을 산정하는 프로그램으로 탄소상쇄기금의 비용은 나무 식재 비용 또는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으로 산정된다.



<탄소상쇄기금산정 프로그램 및 납부증 예시>

자치단체의 일자리 추진 정책과 성과를 「지역일자리 한마당」에서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일자리 대상 수상 58개 자치단체 및 18개 지방공기업이
참여하는 「청년과 함께하는 지역일자리 한마당」 개최

-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화) 서울 COEX(3층 C홀)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지역일자리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 고용노동부는 매년 개최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을 수상자들만의 행사에서 벗어나,
 - 수상 자치단체의 일자리정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고자 자치단체와 함께 시상식과 한마당 행사로 준비하였다.
 - 동 행사는 자치단체 일자리공시제와 관련하여 자치단체별로 전년도 주요 일자리정책 및 성과를 홍보하고 서로 공유하는 자리로서 일반 국민들은 지역의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있고,
 - 자치단체는 다른 지역의 일자리정책 등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벤치마킹 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이번행사에서는 최근 청년고용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지방 자치단체의 일자리 정보와 정책정보 제공, 청년 아이디어 소개,

면접 코칭 등 청년들을 위한 행사도 진행된다.

<청년과 함께하는 지역일자리 한마당>

- ❖ 일시: 2016. 5.31(화) 10:00 ~ 17:00
- ❖ 장소: 서울 COXE (3층 C홀)
- ❖ (전시내용)
 - 자치단체 주요일자리 정책 및 성과 홍보 부스 운영
 - 청년 지역일자리 공모전 수상 아이디어 전시
 - 지방공기업 채용설명회 부스 운영
 - 지역일자리 역사관 및 정책 홍보관 운영
 - 청년일자리 정책관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부스 운영
- ❖ (시상식)
 -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
 - 청년대상 지역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 또한, 지역일자리에 대해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청년들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상과 수상 아이디어 소개,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정책 홍보관, 지방공기업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 청년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찾고자 실시한 “지역일자리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된다.

- 1차 서류심사 및 2차 pt심사를 통해 수상 후보작을 선정하였으며, 수상 후보작에 대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평가(5.21~26)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 현재 <http://reis.or.kr> 에서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청년들의 아이디어에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지역일자리 한마당 내에 전시하고, 아이디어를 활용코자 하는 자치단체에서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 아울러,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서 접하기 어려웠던 지방 공기업 18개 기관이 참여하여 회사소개 및 채용절차 등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붙임】 「지방 공기업 채용설명회」 참여기업 리스트

연번	자치단체명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1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11	2650-1418
2	서울 성동구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6	02-2204-7919
3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30	062-611-1155
4	광주광역시	(재)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177	062-613-5996
5	대전광역시	대전마케팅공사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480(도룡동)	042)250-1200
6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326	042)610-2710
7	대전광역시	대전도시공사	대전 중구 중앙로 118(대흥동)	042)530-9102
8	충청북도	충북지방기업진흥원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1251	010-3117-1963
9	충청남도	충청남도개발공사	충남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 58	041-635-3321
10	충남 당진시	당진항만관광공사	충남 당진시 신평면 삼교천3길 79	041-350-3021
11	전라북도	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소룡동 1641-4	063-472-2312
12	전라북도	전북테크노파크	전주시 덕진구 반용로 110-5	063-219-2330
13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061-280-0631
14	경상북도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731번지	053-602-7043
15	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	055-269-0422
16	부산시	부산교통공사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44번길 20(범천동)	051-640-7211
17	대구광역시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 동구 동대구로 461	053-720-0047
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064-780-3800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율 30.1%”

- 2015년도 조사 결과 공개 -

- 광역 지자체는 대전시(39.6%), 기초는 인천 부평구(49.0%)가 가장 높아
- 특히, 여성친화도시·지자체장이 여성인 경우... 전체 평균보다 높아

□ 정부가 국정과제인 ‘실질적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율이 상승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201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율이 30.1%(’15.12.31.기준)로, 2014년 28.5% 대비 1.6%p 상승했다고 6월 1일(수) 밝혔다.

* ’15년 총 243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15,584개) 위촉직 여성참여율 30.1%

- 지난 2014년 상·하위권 지자체 현황을 공표한 적은 있지만 전체 지자체 243개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지자체 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지자체 총 1만5천584개 위원회의 위촉직 15만9천68명(남성 11만1천157명, 여성 4만7천911명) 가운데 여성참여율은 ‘20~30% 미만’이 42.0%(102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0~40% 미만’ 38.7%(94개), 여성참여율 ‘40% 이상’은 8.2%(20개)로 크지 않으나 꾸준히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 여성참여율 40% 이상인 지자체 비율 : (’13) 6.1% → (’14) 7.4% → (’15) 8.2%

< 여성참여율 40% 이상 지자체 현황(20개) >

- ▶ (서울) 강남·관악·구로·금천·노원·도봉·동작·서대문·서초·성동·양천·용산·종랑구, (경기) 안양·수원·광명시, (부산) 연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서구, (경남) 김해시

* 위원회(15,584개)별 설치근거 : 법률 8,428개, 대통령령 910개, 자치법규 6,246개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중에서 여성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 광역에서는 대전광역시(39.6%), 서울특별시(37.5%)가 높고, 2014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지자체는 충청북도·경상북도(6.3%p)이며,
- 기초에서는 인천 부평구(49.0%), 서울 금천구(45.9%)가 높고, 2014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지자체는 강원 횡성군(9.3%p)으로 조사됐다.

< 여성참여율 상·하위 지자체 현황 >

(’15.12.31.기준)

지자체	광역 지자체 (17개 시·도)		기초 지자체 (226개 시·군·구)		
	광역시(8개)	도(9개)	시(75개)	군(82개)	구(69개)
상위	대전(39.6%), 서울(37.5%)	충북(37.0%), 경기(36.2%)	경기 안양(42.9%), 경남 김해(41.6%)	강원 횡성(34.3%), 경북 봉화(32.7%)	인천 부평(49.0%), 서울 금천(45.9%)
하위	인천(24.9%), 울산(22.1%)	강원(23.6%), 전남(22.6%)	전남 나주(17.6%), 경북 영천(14.8%)	충남 태안(13.4%), 전남 무안(11.1%)	인천 중구(23.4%), 대구 동구(23.0%)
’14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지자체	세종(5.7%p)	충북·경북 (6.3%p)	충남 아산(6.9%p)	강원 횡성(9.3%p)	서울 관악(6.1%p)

□ 특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66개, 33.6%)이거나, 지자체장이 여성인 경우(9개, 40.2%) 전체 여성참여율(30.1%)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지자체장이 여성인 지자체 현황(9개) >

- ▶ (서울) 강남·서초·송파·양천구, (부산) 사상·중구, (대구) 중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과천시

* 여성친화도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시·군·구(지정단위 5년)

- 2년 연속 여성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의 손병숙 경제복지국장 “위촉직 위원 성비를 50%씩 구성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비율 확대에 힘써온 결과,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참여율은 34.5%*로,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성평등한 시각의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 '15.12월 기준 총 437개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위원(7,632명 중 2,633명) 비율 34.5%
- 한편, 여성가족부는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향후 중앙행정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제고를 위해 우수 지자체 등에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약 1만 6천여 개) 현황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관리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하여,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입력·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1】 201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요약)

【붙임 2】 2015년 지방자치단체별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참 고**관련 보도자료 현황**

배포 일시	제목	내용(요약)
2015. 11. 16.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한자리에	전·현직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간담회를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양성평등 제고 방안 모색
2015. 11. 26.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성별비율 첫 공개, '여성 28.5%'	전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점검 결과 공개 및 2017년까지 「여성참여 확대계획」 수립
2016. 3. 22.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34.5%, 역대 최고치 경신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위한 위원회 관리 강화 방안(시스템 구축, 지자체 위원회 현황 공표 등) 마련

붙임 2

2015년 지방자치단체별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15.12.31.기준)

순위 (지역별)	지역명	위원회	’15년 조사결과(12월말 기준)			비고	
			전체위원	여성위원	여성비율		
	전 체(243개)	15,584개	159,068명	47,911명	30.1%		
	광역 지자체(17개)	1,783개	28,555명	8,705명	30.5%		
	기초 지자체(226개)	13,801개	130,513명	39,206명	30.0%		
1	서울 (26개)	계	1,842개	19,443명	7,653명	39.4%	
		광역(1개)	130개	2,867명	1,076명	37.5%	
		기초(25개)	1,712개	16,576명	6,577명	39.7%	
		강남구	70개	677명	276명	40.8%	
		강동구	67개	751명	291명	38.7%	
		강북구	74개	644명	248명	38.5%	
		강서구	62개	618명	240명	38.8%	
		관악구	83개	862명	345명	40.0%	
		광진구	57개	544명	189명	34.7%	
		구로구	65개	657명	277명	42.2%	
		금천구	39개	545명	250명	45.9%	
		노원구	68개	684명	275명	40.2%	
		도봉구	73개	660명	281명	42.6%	
		동대문구	69개	501명	198명	39.5%	
		동작구	74개	637명	274명	43.0%	
		마포구	85개	858명	303명	35.3%	
		서대문구	65개	620명	264명	42.6%	
		서초구	56개	547명	221명	40.4%	
		성동구	74개	716명	328명	45.8%	
		성북구	79개	817명	292명	35.7%	
		송파구	67개	704명	257명	36.5%	
		양천구	70개	693명	300명	43.3%	
		영등포구	79개	674명	247명	36.6%	
		용산구	63개	558명	249명	44.6%	
		은평구	78개	795명	305명	38.4%	
종로구	57개	570명	217명	38.1%			
중구	65개	714명	228명	31.9%			
종랑구	73개	530명	222명	41.9%			
2	대전 (6개)	계	419개	4,893명	1,834명	37.5%	
		광역(1개)	104개	2,077명	823명	39.6%	
		기초(5개)	315개	2,816명	1,011명	35.9%	
		대덕구	62개	522명	171명	32.8%	
		동구	53개	419명	161명	38.4%	
		서구	75개	819명	358명	43.7%	
		유성구	71개	613명	185명	30.2%	
		중구	54개	443명	136명	30.7%	
3	부산 (17개)	계	986개	9,714명	3,217명	33.1%	
		광역(1개)	129개	2,076명	611명	29.4%	
		기초(16개)	857개	7,638명	2,606명	34.1%	
		강서구	46개	370명	114명	30.8%	
		금정구	64개	559명	206명	36.9%	
		기장군	61개	499명	110명	22.0%	
		남구	47개	475명	150명	31.6%	
		동구	41개	334명	107명	32.0%	

순위 (지역별)	지역명	위원회	'15년 조사결과(12월말 기준)			비고	
			전체위원	여성위원	여성비율		
		동래구	55개	496명	149명	30.0%	
		부산진구	52개	455명	173명	38.0%	
		북구	65개	513명	197명	38.4%	
		사상구	51개	493명	176명	35.7%	
		사하구	54개	499명	178명	35.7%	
		서구	46개	405명	143명	35.3%	
		수영구	56개	476명	186명	39.1%	
		연제구	56개	518명	210명	40.5%	
		영도구	49개	442명	157명	35.5%	
		중구	49개	409명	124명	30.3%	
		해운대구	65개	695명	226명	32.5%	
4	제주 (1개)	계	146개	2,008명	661명	32.9%	
		광역(1개)	146개	2,008명	661명	32.9%	
5	경기 (32개)	계	2,319개	24,918명	8,008명	32.1%	
		광역(1개)	119개	2,007명	726명	36.2%	
		기초(31개)	2,200개	22,911명	7,282명	31.8%	
		가평군	53개	424명	115명	27.1%	
		고양시	94개	1,130명	378명	33.5%	
		과천시	70개	610명	208명	34.1%	
		광명시	77개	979명	392명	40.0%	
		광주시	62개	514명	162명	31.5%	
		구리시	65개	569명	196명	34.4%	
		군포시	66개	617명	216명	35.0%	
		김포시	65개	694명	207명	29.8%	
		남양주시	72개	839명	274명	32.7%	
		동두천시	42개	314명	74명	23.6%	
		부천시	197개	2,276명	788명	34.6%	
		성남시	82개	764명	204명	26.7%	
		수원시	67개	788명	316명	40.1%	
		시흥시	59개	541명	175명	32.3%	
		안산시	102개	1,335명	393명	29.4%	
		안성시	68개	667명	166명	24.9%	
		안양시	85개	1,032명	443명	42.9%	
		양주시	38개	359명	93명	25.9%	
		양평군	64개	611명	153명	25.0%	
		여주시	61개	483명	136명	28.2%	
		연천군	52개	529명	145명	27.4%	
		오산시	70개	669명	244명	36.5%	
		용인시	108개	1,096명	357명	32.6%	
		의왕시	34개	337명	103명	30.6%	
의정부시	60개	646명	223명	34.5%			
이천시	66개	702명	205명	29.2%			
파주시	50개	620명	187명	30.2%			
평택시	79개	814명	198명	24.3%			
포천시	69개	696명	198명	28.4%			
하남시	60개	554명	146명	26.4%			
화성시	63개	702명	187명	26.6%			
6	광주 (6개)	계	423개	4,599명	1,457명	31.7%	
		광역(1개)	106개	1,655명	484명	29.2%	
		기초(5개)	317개	2,944명	973명	33.1%	
		광산구	68개	684명	241명	35.2%	
		남구	67개	545명	166명	30.5%	

순위 (지역별)	지역명	위원회	'15년 조사결과(12월말 기준)			비고	
			전체위원	여성위원	여성비율		
7	인천 (11개)	동구	65개	604명	193명	32.0%	
		북구	64개	589명	219명	37.2%	
		서구	53개	522명	154명	29.5%	
		계	772개	8,389명	2,641명	31.5%	
		광역시(1개)	124개	2,013명	501명	24.9%	
		기초(10개)	648개	6,376명	2,140명	33.6%	
		강화군	55개	425명	87명	20.5%	
		계양구	67개	663명	230명	34.7%	
		남구	69개	662명	245명	37.0%	
		남동구	75개	598명	192명	32.1%	
		동구	55개	485명	182명	37.5%	
		부평구	81개	1,273명	624명	49.0%	
		서구	70개	653명	165명	25.3%	
연수구	61개	552명	188명	34.1%			
옹진군	48개	406명	73명	18.0%			
중구	67개	659명	154명	23.4%			
8	충북 (12개)	계	801개	7,564명	2,345명	31.0%	
		광역시(1개)	84개	1,129명	418명	37.0%	
		기초(11개)	717개	6,435명	1,927명	29.9%	
		괴산군	51개	402명	99명	24.6%	
		단양군	32개	288명	92명	31.9%	
		보은군	56개	411명	109명	26.5%	
		영동군	69개	510명	149명	29.2%	
		옥천군	54개	543명	155명	28.5%	
		음성군	57개	420명	93명	22.1%	
		제천시	76개	663명	246명	37.1%	
		증평군	65개	459명	149명	32.5%	
		진천군	56개	558명	181명	32.4%	
		청주시	121개	1,442명	463명	32.1%	
충주시	80개	739명	191명	25.8%			
9	세종 (1개)	계	85개	1,182명	350명	29.6%	
		광역시(1개)	85개	1,182명	350명	29.6%	
10	경남 (19개)	계	1,248개	12,156명	3,569명	29.4%	
		광역시(1개)	86개	1,189명	326명	27.4%	
		기초(18개)	1,162개	10,967명	3,243명	29.6%	
		거제시	85개	899명	298명	33.1%	
		거창군	73개	595명	151명	25.4%	
		고성군	59개	572명	135명	23.6%	
		김해시	77개	860명	358명	41.6%	
		남해군	56개	457명	114명	24.9%	
		밀양시	80개	782명	225명	28.8%	
		사천시	58개	557명	191명	34.3%	
		산청군	47개	389명	114명	29.3%	
		양산시	74개	792명	208명	26.3%	
		의령군	40개	344명	105명	30.5%	
		진주시	63개	668명	206명	30.8%	
		창녕군	48개	399명	126명	31.6%	
창원시	81개	872명	234명	26.8%			
통영시	70개	655명	167명	25.5%			

순위 (지역별)	지역명	위원회	'15년 조사결과(12월말 기준)			비고	
			전체위원	여성위원	여성비율		
		하동군	49개	421명	135명	32.1%	
		함안군	67개	568명	182명	32.0%	
		함양군	54개	471명	114명	24.2%	
		합천군	81개	666명	180명	27.0%	
11	대구 (9개)	계	503개	5,375명	1,565명	29.1%	
		광역(1개)	103개	1,611명	470명	29.2%	
		기초(8개)	400개	3,764명	1,095명	29.1%	
		남구	41개	355명	133명	37.5%	
		달서구	59개	639명	201명	31.5%	
		달성군	51개	431명	66명	15.3%	
		동구	47개	439명	101명	23.0%	
		북구	45개	386명	102명	26.4%	
		서구	51개	433명	119명	27.5%	
		수성구	62개	687명	230명	33.5%	
중구	44개	394명	143명	36.3%			
12	울산 (6개)	계	391개	4,488명	1,285명	28.6%	
		광역(1개)	90개	1,476명	326명	22.1%	
		기초(5개)	301개	3,012명	959명	31.8%	
		남구	51개	468명	141명	30.1%	
		동구	57개	563명	199명	35.3%	
		북구	71개	735명	269명	36.6%	
		울주군	67개	690명	176명	25.5%	
		중구	55개	556명	174명	31.3%	
13	강원 (19개)	계	1,118개	10,985명	2,996명	27.3%	
		광역(1개)	107개	1,638명	387명	23.6%	
		기초(18개)	1,011개	9,347명	2,609명	27.9%	
		강릉시	71개	655명	211명	32.2%	
		고성군	56개	476명	109명	22.9%	
		동해시	58개	524명	161명	30.7%	
		삼척시	57개	466명	148명	31.8%	
		속초시	68개	698명	186명	26.6%	
		양구군	28개	249명	69명	27.7%	
		양양군	46개	377명	115명	30.5%	
		영월군	59개	484명	106명	21.9%	
		원주시	106개	1,074명	316명	29.4%	
		인제군	47개	578명	95명	16.4%	
		정선군	60개	479명	155명	32.4%	
		철원군	55개	479명	112명	23.4%	
		춘천시	72개	868명	286명	32.9%	
		태백시	58개	512명	148명	28.9%	
		평창군	36개	253명	59명	23.3%	
홍천군	25개	269명	74명	27.5%			
화천군	54개	396명	84명	21.2%			
횡성군	55개	510명	175명	34.3%			
14	충남 (16개)	계	959개	9,092명	2,234명	24.6%	
		광역(1개)	91개	1,390명	400명	28.8%	
		기초(15개)	868개	7,702명	1,834명	23.8%	
		계룡시	37개	307명	72명	23.5%	
		공주시	68개	652명	121명	18.6%	
		금산군	63개	554명	100명	18.1%	
		논산시	49개	389명	84명	21.6%	

순위 (지역별)	지역명	위원회	'15년 조사결과(12월말 기준)			비고
			전체위원	여성위원	여성비율	
	당진시	55개	450명	119명	26.4%	
	보령시	66개	621명	143명	23.0%	
	부여군	49개	467명	115명	24.6%	
	서산시	74개	605명	182명	30.1%	
	서천군	53개	468명	114명	24.4%	
	아산시	68개	759명	302명	39.8%	
	예산군	45개	359명	62명	17.3%	
	천안시	95개	901명	183명	20.3%	
	청양군	42개	344명	69명	20.1%	
	태안군	46개	366명	49명	13.4%	
	홍성군	58개	460명	119명	25.9%	
15	계	1,219개	10,862명	2,665명	24.5%	
	광역(1개)	86개	1,197명	428명	35.8%	
	기초(23개)	1,133개	9,665명	2,237명	23.1%	
	경산시	65개	552명	168명	30.4%	
	경주시	63개	555명	101명	18.2%	
	고령군	46개	376명	72명	19.1%	
	구미시	72개	736명	223명	30.3%	
	군위군	33개	253명	56명	22.1%	
	김천시	55개	426명	94명	22.1%	
	문경시	56개	455명	83명	18.2%	
	봉화군	46개	367명	120명	32.7%	
	상주시	41개	314명	71명	22.6%	
	성주군	44개	349명	106명	30.4%	
	안동시	55개	483명	97명	20.1%	
	영덕군	26개	202명	32명	15.8%	
	영양군	39개	294명	64명	21.8%	
	영주시	70개	682명	155명	22.7%	
	영천시	51개	452명	67명	14.8%	
	예천군	45개	321명	79명	24.6%	
	울릉군	45개	370명	66명	17.8%	
	울진군	50개	409명	70명	17.1%	
	의성군	46개	357명	75명	21.0%	
	청도군	44개	371명	79명	21.3%	
	청송군	21개	172명	27명	15.7%	
칠곡군	53개	421명	123명	29.2%		
포항시	67개	748명	209명	27.9%		
16	계	942개	9,043명	2,192명	24.2%	
	광역(1개)	92개	1,349명	336명	24.9%	
	기초(14개)	850개	7,694명	1,856명	24.1%	
	고창군	61개	503명	97명	19.3%	
	군산시	69개	672명	143명	21.3%	
	김제시	72개	582명	188명	32.3%	
	남원시	66개	555명	161명	29.0%	
	무주군	50개	447명	61명	13.6%	
	부안군	57개	506명	115명	22.7%	
	순창군	56개	523명	123명	23.5%	
	완주군	54개	441명	80명	18.1%	
	익산시	80개	783명	252명	32.2%	
	임실군	41개	352명	64명	18.2%	
	장수군	36개	402명	88명	21.9%	
전주시	76개	774명	204명	26.4%		

순위 (지역별)	지역명	위원회	'15년 조사결과(12월말 기준)			비고	
			전체위원	여성위원	여성비율		
	정읍시	69개	623명	173명	27.8%		
	진안군	63개	531명	107명	20.2%		
	계	1,411개	14,357명	3,239명	22.6%		
	광역(1개)	101개	1,691명	382명	22.6%		
	기초(22개)	1,310개	12,666명	2,857명	22.6%		
17	전남 (23개)	강진군	48개	378명	113명	29.9%	
		고흥군	57개	815명	163명	20.0%	
		곡성군	46개	382명	76명	19.9%	
		광양시	76개	746명	183명	24.5%	
		구례군	62개	486명	118명	24.3%	
		나주시	69개	598명	105명	17.6%	
		담양군	41개	697명	219명	31.4%	
		목포시	91개	983명	216명	22.0%	
		무안군	58개	505명	56명	11.1%	
		보성군	54개	402명	105명	26.1%	
		순천시	107개	1,086명	300명	27.6%	
		신안군	37개	291명	70명	24.1%	
		여수시	97개	1,113명	275명	24.7%	
		영광군	57개	485명	95명	19.6%	
		영암군	59개	535명	130명	24.3%	
		완도군	47개	407명	94명	23.1%	
		장성군	56개	463명	99명	21.4%	
		장흥군	54개	453명	78명	17.2%	
		진도군	33개	283명	51명	18.0%	
		함평군	43개	422명	63명	14.9%	
해남군	58개	555명	135명	24.3%			
화순군	60개	581명	113명	19.4%			

※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위촉직의 임기)

‘강릉 신한옥 시범마을’ 2일 상량식

- 전통한옥대비 건축비 60%대 수준, 주거성능 높여 대중화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그간 개발된 한옥 기술을 실험, 검증하기 위해 건립중인 한옥마을의 상량식을 6월 2일(목) 오후 2시 강원도 강릉시 죽헌동 한옥마을 부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행사에는 강릉시장, 국토부 건축정책관, 지역 국회의원, 건설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한옥마을은 대지면적 12,300㎡, 연면적 1,417.14㎡에 총사업비 88억을 투입하여 한옥체험시설 20개동(체험시설 18, 에너지절약형 한옥, 관리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착공, 올해 8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 * 상량식 : 목조 건물의 골재가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대들보 위에 대공을 세운 후에 최상부 부재인 마룻대(상량)를 올리고 거기에 공사와 관련된 기록과 축원문이 적힌 상량문을 봉안하는 의식
- 강릉 한옥마을에는 새로운 한옥기술이 적용되어 지금까지 한옥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건축비의 대폭 감소(3.3㎡당 1천만 원대→ 685만 원대)와 함께, 단열 기밀 성능의 보완 또한 이루어져 아파트와 비교할 때 손색없는 주거성능을 보여줄 예정이다.
 -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맞이하여 많은 내외국인들이 한옥마을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이들에게 신한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관련분야 산업 육성과 기술 수준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국토부와 강릉시는 ‘강릉 신한옥 시범마을’과 문화관광부

지원사업(대지면적:14,432m², 12동)을 연계하여 전통한옥 체험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한옥은 건축적 가치가 크고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으며* 건강주택 경향(트렌드)에 부합하는 미래주택의 최적대안으로, 앞으로 다양한 용도의 한옥 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넓은 실내공간과 고층이 가능한 한옥기술 개발에 주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지난 2014년 한옥공공건축물 이용자 5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80%가 한옥을 실제 사용함에 있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붙임 1 : 국토부 한옥기술개발사업 개요

붙임 2 : 강릉 한옥마을 상량식 일정

- 국토부는 지난 2009년 12월 한옥기술개발연구단(단장 명지대 김왕직 교수)을 발족시킨 이래, 1차 한옥 기술개발 사업('09~'13)을 통해 얻은 각종 기술들을 접목하여 한옥 공공건축물의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2차 한옥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1차 사업은 총 178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 한옥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높은 평당 건축비를 낮춤*으로써 고성능·저비용 한옥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 후속 2차 사업은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총 78억 천만원을 투입하여 5개 한옥 공공건축물을 올해 말까지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지난 2014년 전국공모를 통해 선정한 바 있다.

* 전남 농업체험 교육관, 은평 커뮤니티 시설, 순창 공공어린이집, 수원 한옥 기술전시관, 강릉 한옥마을

<2단계 한옥기술개발 R&D 과제>

과제명		세부과제	연구기관
총괄		연구단 총괄 관리	명지대
1세부	신한옥 핵심기술 고도화 및 기준개발	○ 시범마을 기술지원 및 1단계 한옥 모니터링 ○ 신한옥 핵심기술 고도화 ○ 신한옥 디자인 기술 및 제품개발 ○ 신한옥 성능·품질 기준 및 인증기준 수립 ※ 한옥 기술전시관 구축 포함	명지대
2세부	신한옥 마을 모델 개발 및 구축	○ 한옥마을 최적화 모델 개발 및 구축 ○ 신한옥마을 최적화 모델 개발 ○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 신한옥 마을 구축 포함	전남대
3세부	신한옥형 공공 건축물 모델 개발·구축	○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모델 개발·구축사업 실증 ○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활성화 기반 구축 ○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유형별 모델(안) 개발 ○ 한옥형 공공건축물 실태조사·디자인 방향 제시 ※ 신한옥형 공공건축물(3개) 구축 포함	LH

□ 한옥마을 전경



□ 일정계획(안)

시간		행사 일정	비고
14:00 ~ 14:20	20분	개식, 국민의례	시청 아나운서
		내빈소개	시청 아나운서
		강릉시 감사패 전달	전남대학교, 설계사(금성), 시공사(현영종합건설)
		경과보고	올림픽 도시정비단장
14:20 ~ 14:23	3분	인사말	강릉시장
14:23 ~ 14:35	4분	축사(국회의원)	
	4분	축사(강릉시의회 의장)	
	4분	축사(국토부 건축정책관)	
14:35 ~ 15:25	50분	상량고사	
15:25 ~ 15:25	0분	폐 회	시청 아나운서
15:25 ~ 16:00	35분	다과연	시공사

해수부-강원도, “해양심층수” 개발 위해 손잡는다

- 30일, 김영석 장관·최문순 지사 “해양심층수 육성 업무협약” 체결 -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양심층수*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강원도가 힘을 합친다.

* (해양심층수) 바다 속 200m 이하에서 뽑아 올린 청정수, 다양한 천연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 기능성제품, 의약품소재와 농수산업 등에서 활용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와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30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2024년까지 해양심층수를 약 1.5조 원 규모의 산업으로 육성하고, 강원도 내에 해양심층수 관련 기업 100여 개소가 조성되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관련 산업계에 대한 보다 실효적이고 통 큰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2024년까지 해양심층수 산업에 대한 근접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해양심층수 산업 클러스터” 제도를 도입하고 2025년까지 “해양심층수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기업에 대한 경영 및 창업 지원을 확대하는 데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지원센터 조성과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기존 연구개발 인프라와 연계하여 강원도를 해양심층수 연구개발의 중심으로 조성한다.

그리고 강원도에 “해양심층수 테마파크” 등 체험형 관광시설을 구축

하고, 해양심층수를 활용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기술을 개발하는 등 지역주민의 소득 제고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 등 8개 부처와 공동으로 “해양심층수 종합 지원계획”을 마련한 데 이어, 강원도 고성에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16~’18년)”를 조성 중에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위해 해양심층수 관련 연구개발 투자예산을 2015년 대비 약 200% 확대하고, 규제 철폐 등을 통해 업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김영석 해수부장관은 협약식에서 “강원도와 힘을 합쳐 해양심층수 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여 강원도 지역발전을 위한 중추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 일 시 : '16. 5. 30.(월) 11:00
- 장 소 : 해양수산부 대회의실(5층)
- 참석 : 약 30~40여명
 - (해양수산부) 장관, 기획조정실장, 해양산업정책관 등 주요 간부
 - (강원도 등 지자체) 도지사, 도의회의장, 고성군수·의회의장, 양양군수·의회의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환동해본부장, 기업지원과장 등
-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강원도 업무협약 주요내용 브리핑(해수부)
 - 인사말씀(해양수산부장관, 강원도지사)
 - 축 사(강원도의회 의장)
 -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 그간 추진경위 》

- 2015. 4 : "해양심층수 융·복합 산업 육성방안" 국무회의 상정(해수부)
- 2016. 1 : "2016년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마련(해수부)
- 2016. 2 : "해양심층수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 종합실행계획(안) 마련 (강원도)
- 2016. 3 : "해양심층수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수부-강원도 협업 방안" 협의 및 세부 계획안 마련(해수부-강원도)